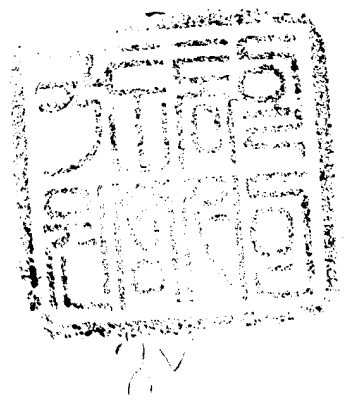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2000년
10월 10일

북쪽 사회 어디에 와 있나



북쪽 사회
김민서
북한사상
북한사상
북한사상
북한사상

북한 연구소

이 책자는 국토통일원의 연구계획에
따라 발간된 것입니다.

책 머리에

조국의 분단이 장기화되고 북한 공산집단과 사상적 대결을 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그들이 내세우고 신봉하는 이론은 물론, 실제로 적용되고 나타난 모습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 자체가 곧 속임수의 전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공산주의에서 표방하는 이론과 그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선전·선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권을 탈취하여 공산화 시키고자 하는 전략·전술 등이 교묘하게 얽혀있어 자칫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호전적인 북한 공산집단의 경우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경각심을 갖고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공산집단이 내세우는 이론과 전략·전술 및 선전·선동 등 속임수의 내용을 낱알이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북한 공산집단의 사상적, 정신적 도전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민족화합과 민주통일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자는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공산화 통일이 아닌 민주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뜻을 담아, 북쪽 사회가 지금 어디쯤 와있는가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모든 측면을 객관적으로 조명,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1986. 12.

북한연구소

차 례

| | |
|-----------------------|----|
| 1. “주체사상”의 실체 | |
| ◇ 통치 이데올로기의 성격 | 13 |
| ◇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 15 |
| ◇ 주체사상의 내용과 구조 | 17 |
| ◇ 이론적·실제적 측면 분석 | 21 |
| 2. 권력세습의 논리와 실제 | |
| ◇ 권력세습의 논리 | 29 |
| ◇ 후계기반 확립과정 | 32 |
| ◇ 후계체제의 실상 | 38 |
| ◇ 승계의 위기 | 43 |
| 3. 경제체제와 현실 | |
| ◇ 경제체제의 특성 | 49 |
| ◇ 경제운동과 현실 | 52 |
| 4. 사회적 일탈과 부조리 현상 | |
| ◇ 사회적 일탈행위 | 57 |
| ◇ 사회 부조리 현상 | 60 |
| ◇ 주민의 불평등 구조 | 63 |
| 5. 교육이론과 실제 | |
| ◇ 공산주의 교육관 | 67 |
| ◇ 교육이론과 정책 | 70 |
| ◇ 교육제도와 운영 | 74 |

6. 민족사 해석문제

- ◇ 공산주의 역사관 83
- ◇ 역사 서술상의 특징 85
- ◇ 민족사 날조 사례 95

7. 문학과 예술

- ◇ 공산주의 문학·예술관 101
-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103
- ◇ ‘종자론’과 ‘속도전’ 106
- ◇ 통제 실태 109
- ◇ 창작성향과 작품내용 112

8. 언론의 기능

- ◇ 공산주의의 언론 개념 121
- ◇ 언론매체의 기능 123
- ◇ 통제와 검열 127

9. 종교 실태

- ◇ 북한의 종교관 133
- ◇ 종교 탄압 135
- ◇ 종교 실태 141
- ◇ 종교단체의 현황 146
- ◇ 종교 이용 정책 154

1. “주체사상”의 실체

통치 이데올로기의 성격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주체사상의 내용과 구조

이론적·실제적 측면 분석

1. “주체사상”의 실체

통치 이데올로기의 성격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란 관념체계, 의식형태, 사상체계, 혹은 기본적인 사고방식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사회의식이 갖는 여러가지 형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치·경제·법률·사상·과학·철학·도덕·종교·예술분야 등의 사회의식 형태로서 물질적, 경제적인 사회의 하부구조를 반영하는 관념적 상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으로 조건화된 일정한 정치적, 계급적 입장을 고수하는 사고방식을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 이데올로기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나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이데올로기의 내용, 기능, 구조적 특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김갑철,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기능, 북한학보(제4장), 1980. pp. 29~33.)

첫째,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지배층, 지배층의 선발문제, 인간의 가치관 및 사회제도에 대한 영향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이데올로기를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데올로기의 일반대중에 대한 역할과 기능문제, 또는 그 기능이 지도자의 권위와 권력행사를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 공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질서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정당화 하느냐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셋째,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조적 측면은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단편적 사고를 무질서하게 조립해 놓는 것인가, 아니면 정교한 이론체계를 갖추고 어

는 정도의 독창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모든 정치체제는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그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나, 자유민주적 개방사회와 전체주의적 폐쇄사회에서는 그 존재양태가 각기 다르게 표출된다.

다시 말해 개방사회에서의 정치이데올로기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폐쇄사회에서는 유일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할 수 있음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유일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함으로써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권력행사가 정당화되고, 사회적 동원을 합리화시켜 주며, 인민대중의 열광적 지지와 충성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이데올로기는 정치지도자에 의해 법과 도덕을 이데올로기로 대체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까지도 결합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가 창조하고 해석체계를 결부시킨 이데올로기로부터 자기 통치의 정당성과 통치명분을 도출해 낸다.

더우기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인민대중의 의식을 마비시켜 그들의 명령체계에 무조건 순응케 하는 동조효과의 획득과 함께 무한한 정치적 상징 조작을 가능케 하고 있다.

결국 폐쇄사회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통치의 수단이며, 정치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대중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는 각기 상이한 객관적 상황에 국면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광범한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원주의적 개방사회에서의 이데올로기는 자유경쟁적 이데올로기로서 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기존 이데올로기와 다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당과 국가가 이데올로기를 독점한 채, 그 해

석과 응용까지도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립된 견해나 주장은 교조주의, 사대주의, 수정주의라는 가혹한 사상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북한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이 창조해낸 혁명과 건설의 가장 위력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 또는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고 규정(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p.553.), 그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공식화하고 있다.

또한 그들 당기관지(근로자, 1985. 8월)에서는 “김일성이 아직 20대에도 이르지 못한 나이에 특출한 사상이론활동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 조선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고 날조하고,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 걸쳐 이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고, 이 투쟁을 통해 전체 인민은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대로만 숨쉬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되었다”(평양방송. 86.1.1)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주체’를 당적 이데올로기로 확립할 필요성을 최초로 거론한 것은 스탈린 사망(1953년)후인 1955년 12월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가운데서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 학설”(김일성 저작선집 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 570.)이라고 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각국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불패(不敗)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역설한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이것을 ‘자주로선’으로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한 것은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를 통해서 였다.

김일성은 이 사실을 통해 중·소분쟁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즉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이른바 ‘자주로선’을 내걸고 각국 공산당간의 “주종관계란 있을수 없다”고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북한의 주체사상은 당내 권력투쟁에서 김일성의 당적 지도권을 옹호,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상의 무기로서, 또는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중립을 통한 내정간섭 배제와 실리추구를 위한 명분논리였다.

이 같은 ‘주체사상’은 1972년 12월에 제정된 북한의 이른바 「사회주의 헌법」(제4조)에 까지 삽입되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주체사상’을 중공에서의 모택동사상과 같이 절대화, 유일화시킴으로써 전체주의 독재권력이 완벽하게 확립되어 가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동당규약’ 전문에서도 “조선로동당을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후, 1974년 5월25일자 「로동신문」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 하자」라는 사실을 통해 당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전체를 주체사상화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사상이 북한의 유일사상체계로 정식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80년 10월 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전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과제가 공식화됨으로 해서 ‘주체사상’은 북한 전체 주민이 믿고 따라야 할 신앙체계로 확립되게 된 것이다.

더우기 1985년 10월호 「근로자」지를 통해 사상이론가라고 자부하는 양형섭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가 주체사상의 모든 사상이론적 내용을 새로운 이론적 재부(財富)들로 발전, 풍부화시켰으며,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계승해 나감으로써 불패의 위력을 가지고 전도 양양한 전투적 당으로 끊임없이 강

화, 발전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주체사상이 김일성 왕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권력 세습화의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체사상의 내용과 구조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이고 김일성 혁명사상의 핵심이며 총체라고 할수 있는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이 주체사상의 요구라는 것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체와 원동력을 인민대중에 귀착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위해서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만 되는데, 이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에서 표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은 1972년 4월 「전국사회과학자대회」의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에서도 명백히 제시된 바 있다. 즉 김일성 사상 담당비서였던 양형섭은 ‘자주적 입장’이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 나가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창조적 입장’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역사적 조건에 맞게 적용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과 혁명사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혁명사상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상체계라는 것이고,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김일성 혁명사상의 첫째 구성요소인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그들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근본입장과 원칙적

태도이며 또한 김일성 혁명사상이 주체사상의 이론적 방법론적 기초”라는 것이다.(공산권자료, 1972년 4월호, pp. 13~19.)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데 확고히 견지해야 할 최고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김일성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 단결하며 김일성의 유일한 영도밑에 투쟁 건설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의 혁명사상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의 구성요소라고 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상이론체계가 바로 혁명과 건설사상이며, 이 혁명과 건설사상은 당 유일사상체계의 제1차적인 구성요소가 되며, 당 유일사상체계는 다시 주체사상체계가 된다는 식의 비논리적 사상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더우기 이 같은 사상체계로 부터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4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주체사상의 구현형태로 정식화하고 있다.

‘사상에서의 주체’는 사상적으로 타국에 지배되고 간섭을 받을 때 자유로운 사고는 마비되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제기했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외적으로는 1950년대 스탈린 사망 후 공산블럭내의 균열이 다원화되는 추세에 편승하고 대내적으로는 당내의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 종파주의자 등의 이른바 이질분자들을 숙청, 김일성 자신의 권력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려는데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1956년 12월 1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된 것으로, 이는 1차 5개년 계획(1957~1961)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소를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원조를 기대했으나 좌절되어 동 계획 추진에 차질을 가져온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 시기 김일성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경제건설은 자급자족”이라고 말하고, 자립경제의 목표는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없애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 공업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1959년 2월 이른바 「천리마 작업반운동」을 시작하여 ‘자력갱생’의 구호를 부르짖게 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력갱생을 위하여 “민족적 자립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의 모든 선전매체들은 ‘자력갱생’이 김일성의 독창적 이론체계임을 강조, 대중노력동원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그의 이상 조작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력갱생’은 모택동이 1935년 12월 세계공산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최초로 주장한 바 있고, 또한 1958년에 시작한 「대약진운동」이 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장벽에 부딪치자 다시 「자력갱생」을 강조한 실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이를 창시했다고 선전한 것은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과 경공업 및 농업발전을 위한 대중의 정치동원을 위한 책략구상의 일환임은 물론, 위로부터의 혁명과 불만세력에 대한 계급투쟁의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정치에서의 자주’란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데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 북한은 “모든 당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동등한 성원이라고 전제하고 당의 대소(大小)는 있어도 지배와 복종 관계는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앞으로 온갖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대국주의를 경계해야만 한다”(「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근로자, 1966년 10월. p. 21.)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일성은 중·소를 명확하게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은연중 소련을 겨냥하여, 「정세변화와 창조적 발전」이라는 구실하에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하여 혁명적 진수를 거세하고 계급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현대 수정주의적 당”이라고 하면서 이를 ‘부르조아 사상’이요, ‘우경적 기회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중공에 대해서는 ‘좌경 기회주의’라고 비난하면서 “교조주의이고 소부르

조아 사상”이라고 공박하기에 이르렀다. (근로자, pp. 12~13.)

‘국방에서의 자위’란 당 주체사상을 국방정책에 응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위적 국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시기와 6.25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스탈린 또는 모택동과 같이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시키려는 동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즉 중공업이 곧 군사력의 물질적 기초임은 물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과 함께 자립과 자위를 강조하는 것은 군사적 방위보다는 대중의 희생 위에서 군사적 공격에 우위를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조태훈, 주체사상에 관한 철학적 분석비판, 공산권연구, 1982. 5. pp. 79~80.)

특히 1964년 2월27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소위 남조선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구체화하고 이 때부터 “남조선혁명을 지원,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군사적 강화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인민 무장화, 전국토 요새화”라는 ‘4대 군사로선’을 견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하는 ‘주체사상’은 수령의 교시대로 혁명에 추종해야 한다는 사상이요, 「주체의 이론」이란 혁명만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수령 한사람만의 독단적 교조이며, 「주체의 방법」은 절대화, 신비화된 수령만이 인민대중을 영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인이 그에게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이 의도하는 혁명의 성격과 그 수행방도,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목표등은 말할 나위없이 대내적으로는 전체 주민의 획일적 동조심리를 자극하고 복종심을 유발, 김일성 유일독재체제를 합리화하려는데 이용하고, ‘혁명적 인생관’을 주입, ‘남조선 혁명’과 적화통일이 인민대중의 최종 목표이자 과업이라는 신념을 소유토록 하려는데 귀일시키고 있다.

더우기 대외적으로는 대중·소관계에서의 ‘중립로선’의 견지를 뒷받침 해주는 이론적 무기로 활용하고 제3세계의 침투를 위한 전략사상으로 이용하려

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실제적 측면 분석

이상과 같이 주체사상의 내용과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주체사상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규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 이데올로기적으로 의식하는 존재이고,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고 강력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규정마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의 전반적 논지도 관찰해 보면 「사람은 복한의 수령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수령, 즉 김일성 한사람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논리와 직결된다.

또한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 특히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전반적으로 밝힘으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철학’이 “사람을 위주로 하는 철학”이라면서 「사람」 결정론을 기본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유물사관의 공식으로 고정화 되어 있던 ‘토대결정론’에 대한 전후(戰後) 소련에서의 수정이론인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대적 독립성」, 「상부구조의 토대에 대한 반작용적 영향설」등을 그대로 수용한 것일 뿐이다. 더우기 ‘주체철학’은 이 같은 수정이론의 토대 위에서 유물론을 주의주의적(主意主義的) 정신주의로 변조함으로써 북한체제에서 전체주민을 정치에 동원하는 현실을 「상부구조의 적극적, 능동

적 역할」 명제로 합리화하기 위함이다.

이같은 점에서 ‘주체철학’은 유물론인지 관념론인지 그 철학적 입장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념론 내지는 의식동원을 위한 전체주의적 파시즘 철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성격, 아시아연구, 제62호, 1979. p. 36.)

둘째, 주체사상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자주적 입장’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오직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해결해 내가는 독자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발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주체사상의 구현인 당정책과 노선이 가르친대로 꾸려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여, 개인의 자주성은 당의 자주성에 귀속되고 당의 자주성은 김일성의 자주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결 짓고 있다.

또한 ‘창조적 입장’이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리를 특수한 현실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자체가 바로 수정주의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세째로, 주체사상이 의도하는 바는 혁명지상주의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참다운 삶은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참가하는데 있으며 혁명적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참다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을 볼 때 인간의 본성을 ‘혁명성’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것은 혁명을 위한 지식, 혁명을 위한 의식으로 개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주체사상에 있어서의 주체란 혁명수행의 주체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은 혁명지상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인간중심」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은 결국 인간을 ‘혁명적 존재’로 규정하게 되었으

며, “일체의 변화와 개조는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혁명광신적 신념 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태훈, 위와 같은책, pp.83~84)

다음은 주체사상의 내용을 실제적 측면에서 관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주체사상은 주민노력 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신적 자극제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주체사상의 논리에 의하면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혁명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적극적 혁명정신이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인민의 자발적인 참여정신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 나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이론전개는 「적극적 혁명정신의 발양」이라는 이름하에 자력갱생을 위한 대중노력 동원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우기 북한에서는 재산의 사적 소유가 봉쇄됨에 따라 소유욕에 의한 창조성과 능동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대다수 주민들은 수동적 자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인간개조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결국 “능동적·창조적·자주적·자발적 성향”을 결비한 「주체형의 인간」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의 이론적 합리화 작업이 주체사상이라는 형태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의 합리화 수단으로 철저하게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자주적, 창조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당정책과 노선이 가르친 대로 따르는 것”(로동신문, 1972. 4. 12일자 사설)이라 하여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 숭배를 합리화 하는 이론임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라 하여 주체를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주체’는 개개인의 주체도 당의 주체도 아닌 오로지 김일성 개인의 주체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의 이상화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적 책략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세제, 주체사상이 남조선 혁명을 위한 이론적, 사상적 무기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출판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이론>(허종호, 1975. p.3.)에 의하면 “미제의 식민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쇼통치를 뒤집어 엎고… 미제를 내쫓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전체 조선인민의 지상과업”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위업의 위치 규정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성격 규정에도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위치규정」과 「성격규정」에서 귀결된 바는, 「주체」라는 명분하에 주한미군을 철수케 하고, ‘남조선 혁명의 주체’가 ‘남조선 인민들’ 자신임을 강조하여 남한에서의 혁명정세를 조성하고, 나아가 폭력혁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남한의 정치·경제 및 여러 분야의 지도적 담당자들은 비주체적이라고 선전하여 이른바 「전국적 범위에서의 공산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조태훈, 위와 같은 책. pp. 86~87.)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과업관철을 위해 주체사상은 이른바 주체적 세계관을 역설한다. 즉 “주체적 세계관은 혁명적 세계관이며, 혁명적 세계관은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혁명적 세계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와 그것을 때려 부수어야 되겠다는 혁명적 결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이론. p. 30.)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혁명적 세계관 확립의 요구와 함께 「남조선 혁명」과 「적화통일」을 위한 사상적, 이론적 무기로 이용하여 왔다.

위에서 주체사상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거니와, 결국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사상」이라고 하면서도 김일성 한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상임은 물론,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강조한 것은 당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인민대중에게 자력갱생 및 혁명정신을 고취시키려는 것이었다.

또한 실제적 측면에서의 주체사상은 근로대중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키 위한 것이었고 김일성 개인 이상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주체사상은 내부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북침설을 날조하고, 나아가 「적화통일」의 선결조건으로서 「남조선 혁명」 조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기만적 술책이며 비과학적 허구의 관념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몇가지 실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이란 혁명에서의 대중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김일성 자신과 공산주의체제 최초의 세습자인 자기 아들 김정일에 대한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영국 The observer, 1983. 6.9)

“이런바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전혀 비과학적이며 반동적 관념론이다.”(일본 공산당기관지 적기(赤旗) 1983. 12.9)

“1977년 9월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토론회」에는 73개국으로부터 89명의 공식적인 대표들이 참가했으나 중공과 소련으로부터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5대륙에서 온 참석자들은 누구도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다못해 그 토론회의 본질에 관한 온건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바도 없었다. 오직 김일성만이 숭배되고 찬사를 받았다.”(서대숙, “김일성 그 성격과 정치”, 김준엽, 스칼라피노 공저 <북한의 오늘과 내일>, 법문사, 1985. p. 75)

26 “주체사상”의 실체

“주체사상은 우리 사회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죽은 사상이 아니면 인간착취 정책을 옹호하는 사상이다. 내가 알기로는 주체사상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새로운 체계일 뿐이다.....

주체사상은 아프리카 인민을 위한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계급을 위해 북한 인민을 통치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주체사상은 노동자 착취를 위한 새로운 주의요, 체계이다. 이것은 북한 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주체사상은 인류의 혼란, 인간파멸의 범죄정책을 유도하는 새시대를 열어 놓았을 따름이다.

주체사상은 노후의 물질적 보장,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한 미래, 또는 노동자들에게 내일에 대한 착실한 신념을 주는 사회적 낙관주의가 아니다.

주체사상은 인민의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을 지배하고 있는 몇몇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시에라레온 *The New Citizen*, 1985. 3. 30. ~4.4)

2. 권력세습의 논리와 실제

권력세습의 논리

후계기반 확립과정

후계체제의 실상

승계의 위기

2. 권력세습의 논리와 실제

권력세습의 논리

공산국가에 있어서의 정치체제는 절대권을 장악한 독재자의 사상과 경험의 총체가 집약된 것으로서 그 나라 독재자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국가의 권력승계는 독재자의 사상과 정책 및 통치체제를 이어 받아 지속시키는 절대권자의 인격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국가에 있어서의 권력승계자는 예외없이 선행자의 사상과 정책을 변경시켜 왔다.

이로 인해 공산국가에서 권력승계가 발생할 때 마다 위기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이 같은 승계위기의 불가피성은 공산국가에서는 공인된 권한을 갖는 정책결정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합법적 승계방법이 고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에서는 통치자나 독재자가 부재하는 경우, 즉 승계위기의 기간에는 당 규약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권과 통치권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서 체험한 바다.

또한 통치자가 후계자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권력승계를 위해 제도적 보장을 해주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결국, 정통성의 원칙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승계문제의 조정을 위한 통치자의 수단이란 제한적이고 부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산국가에서 새로운 통치자는 정연한 권한의 이양에서가 아니라 권력의 탈취에 의해서 권좌에 오르기 때문에 공산국가에서의 승계위기는 필

연적인 것으로 되어 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권력승계문제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후계체제의 정통성 확보문제와 권위체제의 준거에 대한 동조문제가 그것이다.

북한에서는 권력세습의 이론전개와 후계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른바 김일성의 ‘후계자론’, ‘수령결정론’, 그리고 ‘지도자론’이라는 교리를 체계화하여 김정일 후계지위의 정당성 인식을 위한 노력을 집중시켜 왔다.

특히 ‘지도자론’에서는 “혁명계승론, 세대교체론, 혈통계승론, 역사적 준비단계론, 김일성 화신론”등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권력세습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 ‘혁명계승론’이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야 완수될 수 있는 역사적 위업”(조총련, 선전자료, 평양, 1977, 북한의 실상, 정신문화연구원편)이라는 논리로서, 이는 소련에서 스탈린 사후에 제기되었던 「스탈린 격하운동」과 중공에서의 모택동 후계문제와 관련된 권력암투에 자극을 받고 김일성 사후에 제기될지도 모를 「김일성 격하운동」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총련」 선전자료 등에서 확신할 수 있다.(위와 같은 책, 1986. 7. pp. 25~29.)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후계자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 할 때는 야심가, 음모가들이 나타날 수 있고 권력쟁취전과 같은 혼란이 조성될 수 있다.”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소련의 경우 스탈린 사후에 후계자가 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에 충실하지 못하여 그에 반감을 가지고 모독하였으며, 심지어는 그의 묘까지 파는 현상이 일어났고, 중공의 경우 모택동 후계자로 지목된 임표와 강칭 등 4인 무리들의 반당적이며 독자적인 행동은 올바른 후계자를 내세우지 못한 데 있다.”

둘째, 「세대교체론」에 의하면 “후계자는 같은 세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서 나와야”하며 수령의 후계자는 “영도자로서의 위대한 풍모를 갖춘 인물임과 동시에 새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론, 평양. 1980. p. 84.)

셋째, ‘혈통계승론’이란 “수령의 핏줄을 이어 받은 자가 후계자로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서 “수령의 혈통을 계승하는 후계자라야 누구 보다도 인민대중의 기대와 신뢰를 받으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게 된다”(위와 같은 책, p. 80)는 것이다.

네째, ‘역사적 준비단계론’이란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이 지니고 있는 사상과 이론, 영도예법(領導藝法)을 배우고 이어 받을 역사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조충린, 선전자료, 평양, 1977)

다섯째, ‘김일성 화신론’은 “김일성 동지는 수령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영도예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체현하고 계시는 사상의 천재, 영도의 천재이며 인민의 자애로운 스승”이라는 등으로 미화함으로써(위와 같은 책, 김정일을 김일성(즉 수령)의 화신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들의 당이론, 서적 등에 이른바 「수령후계자의 자질과 요건」등을 제시하고 있다.(이우정, “최근 북한 권력구조상의 변화와 특성”, 월간 정책연구 제65·66호. 1984. pp. 20~24.)

그들이 제시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령후계자는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되고 수령을 위한 충성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곧 김일성에의 절대적 충성이 후계조건인 제1차적인 것이며, 이 경우 사회전반의 동원된 충성의 구심점이 수령이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수령후계자는 비범한 사상 논리의 이론을 체현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고 또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시함을 의미한다.

셋째, “수령후계자는 혁명적 조직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권위의 정당성이 약한 지도자일수록 이 문제는 중요하며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반동 극복을 위한 혁명적 정력과 강인성을 통한 혁명위업의 계승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네째, “수령후계자는 수령의 품모를 계승하고 인민적 품성과 공산주의적 덕성을 구비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카리스마」적 면모와 인민적 「이미지」를 조화시킴으로써 소외되지 않는 지도자상을 구현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후계요건에 대해서는, (1)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에 의해 육성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후계자 결정의 주체는 수령이며 수령의 후견하에 육성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2) 수령과는 세대가 달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후계자의 세대를 결정해 두고 있다는 것이고, (3)수령의 생존사에 후계자가 추대되어야 한다고 단정함으로써 사후에 생길 수 있는 승계위기를 방지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한 그들의 명분과 논리를 검토해 보았거니와 다음과 같은 이론상의 갈등과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역사적 유물론에 의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인민’이며 인류역사는 인민의 창조적 노력에 의하여 발전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수령결정론’, 즉 인민의 역할보다는 수령의 역할만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는 역사적 유물론과 정면으로 상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사, ‘수령결정론’을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수령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결국 북한 권력승계는 봉건시대의 신분세습논리에 불과한 자가당착적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후계기반 확립과정

북한의 기상천외한 권력세습논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절대권자로 등장한

「또 하나의 태양」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소련의 싸마르칸트에서 당시 소련군의 한 첩보부대원으로 복무하던 김일성과 김정숙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슈라」라는 소련식 이름을 갖게 되었다.

8.15직후 그의 생모인 김정숙과 함께 평양에 들어온 김정일은 1948년 9월 평양 남산인민학교에 입학하여 1955년 졸업과 동시 남산고등중학교에 진학, 1958년 8월 졸업했다.

이 두 학교를 통칭하여 남산학교라고 부르는데 이 학교는 북한 사회의 고위 간부들 자녀들만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이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김정일은 동독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곳의 항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성적불량으로 2년만에 중퇴하고 돌아와서 1961년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2학년에 편입, 1964년 8월에 졸업을 하였다. 졸업과 동시, 1964년 로동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지도원이 됐으며 조직지도부의 책임지도원, 과장, 부장의 직책을 거쳤다.

1973년 9월에는 당 중앙위원회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비서와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승진하고 다음해 4월에는 정치위원회 정위원의 지위를 확보했다.

한편 김일성은 1973년 2월 중공 모택동의 문화혁명소조를 모방한 이른바 「3대 혁명소조」를 조직하여, 북한의 모든 공장·기업소·농장 및 각급기관에 소조원을 파견, 이들을 통해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김정일과 엇비슷하거나 그보다 아래인 연령층의 청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대부분 해방후 세대로서 김일성 유일독재 체제하에서 오로지 무한한 충성심과 맹목적인 복종심으로 충만되어 있는 자들이다.

더우기 1973년 9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당시 부주석이었던 최용건과 부총리였던 김일의 제청으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으며, 그때부터 실권 강화작업이 본격화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김정일의 세습책봉은 사실상 1949년 9월 그의 생모인 김정숙의 사망 당시 그녀의 유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숙은 숨을 거두기 직전 유언으로 “「슈라」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시 민족 보위상이던 최용건은 장례식에서 한 추도사를 통해 김정숙의 유언 실행을 맹세했다고 한다. (내외통신, 1986. 2. 14.)

그후,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는 김정일이 제안했다고 하는 이른바 「당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1974년 2월은 바로 김정일이 33세가 되던 해로서 김일성이 33세 때 이던 1945년 가을 소련에 의해 장차 북한의 통치자로 지명되었던 점과 관련시켜 보면 33세라고 하는 연령적 일치성을 갖고 있어 김정일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공식화해 주기 위한 계산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나서 1975년 부터 김정일의 생일은 「2월 명절」이라 하여 공휴일로 결정하고 생일축하를 하게 된다.

또한 1975년 말부터 북한 전역에는 「김정일은 김일성의 대를 잇는 유일한 지도자」라는 슬로건이 난무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1976년에 들어서자 2월 16일부터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청소년 층성의 축전기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축하행사와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여 김정일 생일행사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그 이듬해인 1977년 2월부터는 김정일에 대한 호칭도 “인류가 낳은 걸출한 지도자” 또는 “공산주의의 미래의 태양”으로 불리워지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1980년 10월에 개최된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정치국 서열 제4위, 서기국 서열 제2위, 군사위원회 서열 제3위에 선출되어 이 때부터 명실상부한 「제2인자」로 부상됨은 물론, 세습 황태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게 된다.

특히 80년 당대회 이후 부터는 호칭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지도자”, “미래의 수령”, “탁월한 사상이론가이며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영도력을 지닌 인민의 참다운 지도자”로 추앙된다.

뿐만 아니라 괴이한 사실은 김일성(金一星)이 김일성(金日成)으로 한자를

개명하여 등장한 것은 1945년 10월 10일부터 14일이었고 김정일(金正一)이 김정일(金正日)로 등장 한 것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14일동안 열렸던 당 제 6차대회에서였다.

공교롭게도 이름자의 변화나 날짜를 잡는 것이 같다. 김일성의 생애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과거를 모방하여 김정일의 생애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마련코자 한 것 같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다. (장경근, 우상의 동료, 신원문화사, 1985. 12. p.56)

특히 1983년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김정일을 「통치실권자」로 부각시켜 오다가 그해 2월 16일 김정일을 「주체혈통의 유일후계자」로 선포하였다. 또 7월 4일에는 이른바 김일성주의를, 10월 17일에는 김정일을 「당의 수위」라고 호칭하고 「김정일 시대」를 공언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1985년에는 그의 생일이 「2월의 명절」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 최대의 경사’라는 표현으로 발전했다. 이는 김일성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부르는 것과 대응하는 호칭으로서 「김 부자」는 드디어 동격이 된 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80년도 이후 김일성 후계자로 공식화됨과 아울러 김정일에 대한 우상조작 실태는 신격화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백두산에 깃든 전설〉 (평양방송, 82. 4.27)

“향도의 별님(김정일)이 한번 빛을 뿌리기만 하면 만물이 소생하고 젊음이 약동한다.”

“향도의 별님은 천지 조화도 부리고 천지 확장술도 쓴다.”

“향도의 별빛이 한번 바다 위로 금을 긋고 지나가면 방금 그것이 옥토로 변하고 천길 지하도 한번 비추기만 하면 그것이 땅 속의 금은 보화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온다.”

〈로동청년, 83. 2.8〉

“김정일이 손을 한번만 쳐들면 순식간에 공장이 일어서고 노적가리가 솟아 나고 또 그 분을 한번 만나고 오면 평범한 농부가 교사로도 되고 장수로도 된다.”

“대담한 작전과 통이 큰 구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의지 하나의 돌파구를 뚫는 일, 백의 매듭을 푸는 비방, 세심한 통솔력과 비상한 조직력,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하시는 지략, 일단 시작한 일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막아도 끝장을 보고야 마는 완강성, 이것이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께서 진행하시는 영모의 풍모이다.”

〈문학예술적 재능 선전〉

“김정일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두드리는 북소리를 듣다가 한 무용수가 북채가 아니라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를 알아 차리고 쫓아 가서 고쳐 주기도 한다.”

“영화 화면에서 편집자의 잘못으로 3초분의 필름이 잘려 나간 공백을 알고 상영을 중지시켜 이를 꼬집어 낸 명감독이다.”

“김정일은 약 2년동안 신문기사를 바로 잡기 위해 기자들에게 270여 차례의 훈계를 주고 자그마치 3,500여건에 달하는 사실, 논설, 정치기사, 사진배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었는가 하면, 200여개의 문장을 친히 교정해 주는 문장의 천재이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 하라」를 비롯한 4대 혁명가극에 필요한 192편의 노래를 고르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우며 듣는 노래가 자그마치 8,000여곡에 달한다.”

〈각종 호칭〉

“조선의 미래, 예술의 천재, 향도의 별, 위대한 김일성주위의 신봉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한 후계자, 우리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은혜로운 스승, 주체사상의 완벽한 체현자, 대대로 내려오는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가정의 혈통을 이어 받으시고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인 예지,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시고 주체위업의 진두에 거연히 서신 친애하는 지도자...”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이란 사랑은 고스란히 다 쏟아 부으시는 지도자 동

지, 찬란한 태양,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세계혁명의 위대한 지도자, 사상이론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 등

이와 같이 종래 김일성에게만 붙이던 호칭을 사용하면서 김일성과 동격의 차원에서 이상화 조작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에 국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확대하였다.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비례적으로 그의 생모인 김정숙에 대한 이상화도 일층 심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1974년 부터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1973. 9)됨에 따라 김정숙을 “혁명의 어어니”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라고 호칭하면서 이른바 「김정숙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출생지인 함경북도 회령을 비롯하여 신파, 주을 등지에 그의 혁명사적관과 동상을 건립함과 동시에 평양 대성산의 「혁명 열사능」에는 김정숙의 반신 조각상을 세워 놓는 등 그녀를 “혁명활동가”로 공식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더우기 그녀가 항일 혁명활동의 근거지였다고 조작한 양강도 신파군을 소위 “김정숙군(郡)”으로 개칭하는 등 이상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1981년부터 그녀의 출생일을 1919년 12월 24일에서 1917년 12월 24일(81. 12. 23. 로동신문)로 조작하고 1982년에는 탄생 65주년을 부각시켰다.

동 행사에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 전역에서 김정숙의 생애 및 혁명활동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이라는 것을 개최하는가 하면 김정숙에 대한 찬양 노래, 즉 “김정숙 어머니님 우리 어머니님” “우러러 따르는 우리 어머니님” 등의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시켰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회령까지 답사행군대를 조직하여 이른바 「회령애로의 독서행군」을 강행시키는 등으로 김정숙에 대한 회상실기, 소설, 시 등을 비롯하여 김정숙의 생애와 소위 「불멸의 업적」을 담은 책들을 널리 읽히

도록 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의 김정숙에 대한 이상화 책동전개는 김정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의 후계자적 지위가 공식 표면화 된 이후 김정일이 그의 생모에 대한 「혁명활동」의 재료를 발굴, 조작토록 하는 등의 이상화에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김정일이 일찌기 생모 김정숙과 사별(7세)하고 계모 밑에서 성장함에 따라 생모에 대한 그리움이 무분별한 이상책동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숙에 대한 이상화는 김정일 권력승계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고 있다.

후계체제의 실상

일반적으로 김정일의 성격과 의식구조에 대한 인식은 포악, 과격, 도발적, 모험주의적, 즉흥적, 불신과 증오, 열등의식, 병적 잔인성, 호화방탕, 호색광, 오만무례 등의 성격 소유자로 알려져 왔다.

이와 같은 성격을 형성하게 된 배경은 말할 나위없이 계모와 이복 동생들 사이의 생활과 절대적 독재자의 장남이라고 하는 특권적 지위를 누려온 환경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실상, 도서출판 고려원, 1986. 7. pp. 29~32.)

김정일은 계모 김성애 밑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모성에 결핍증」이라고 하는 정신적 불안과 취약성으로 인해 타인을 이유 없이 불신하고 증오하는 성격을 소유하게 되어 “생모와 닮은 연상의 여인과 동거생활”을 한 다던가, “측근이라도 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가차 없는 숙청”을 단행한다든지 “대중 행사시 피격방지를 위해 사진기자들의 후렛웃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왔다. (귀순자 증언, 위와 같은 책. p. 30)

한편 계모 김성애(여맹 위원장)와 그의 이복 동생들에 대한 잠재적 피해의

식과 증오의 발산으로 1975년에도 종래 김성애에게 사용하던 ‘여사’ 호칭 대신 ‘동지’ 칭호만을 사용케 하고(취순자 김부성 증언), 「여맹」조직내의 김성애 측근 인물들을 대거 축출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대학 동창생들을 기용하였다. (취순자 강형순 증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애는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에 대해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라고 찬양하는 등 김정일에게 공식적으로 굴복을 하는 일면을 보이기도 한 바 있다. (1975. 11.17. 「여맹」 창립30주년 김성애 연설)

그러나 김정일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신문·방송 선전매체에서 김성애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도를 대부분 통제하면서 최근에는 「결가지 문제에 대하여」(결가지=김성애·이복동생 지칭)라는 지침서를 하달하고 이들에 대한 동향 감시와 견제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순자 강형순 증언)

특히 김정일은 유년시절부터 애정의 결핍 속에서 성장함에 따라 그의 아버지와 연장자에 대한 증오심이 의식저변에 잠재해 있어 자제력을 상실한 즉흥적인 불순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성격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김정일의 성격은 「1972. 4. 김일성 60회 회갑연회 석상에서 계모 김성애와 참석한 김일성에게 그의 생모와 촬영한 사진을 선물로 전달」한 실례가 있고(취순자 증언, 위와 같은 책. p30.) 「1980. 10. 6차 당대회 기념 평양시 군중시위시 고위 간부 및 수천명의 군중이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즉각 토로」(1980. 10. 11 북한 TV)한 실례 등이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부터 김일성의 절대적인 비호 아래 핵심부서인 중앙당, 호위총국 등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오만무례한 성격을 갖게 되어 1950~1960년대 간부들에게 “야 무엇 무엇을 해라” “이랬소 저랬소” 등 반말 투를 거침없이 사용 (취순자 증언, 위와 같은 책. p31)하는가 하면, 1982. 4월 평양 개선문 참관시 오진우 등 고위 노간부들이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는데도 유독 김정일만이 아버지(김일성)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대하는 등 오만방자한 행동을 표출(로동신문 사진, 위와 같은 책) 한 바 있다.

40 권력세습의 논리와 실제

특히 김정일은 후계자가 될 만한 뚜렷한 업적이 없는데다 능력과 인격이 부족함에 따른 심한 열등의식은 공격성과 복수심을 자극, 병적 잔학성을 노정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는 다음과 같다.

“평소 빈병과 미국인 모형을 표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격을 즐긴다”(영원한 성좌, 1982)

“항상 집무실 설함에 권총을 넣어 두고 있다.”(귀순자 증언)

“공개 총살현장을 자주 참관한다.”(귀순자 증언)

“75년 이후 대남 테러 행위 책임자로 있으면서 부단히 공작원들을 남파, 살인을 자행함으로써 한국 국민을 겁주려 했다.”(서독 Die Welt지, 84.8.13일자 「격상된 황태자」라는 제하의 기사내용)

“김정일은 또한 미군 2명을 북한병사들이 도끼로 살해한 1976년 사건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서독 Die Welt지, 위와 같음)

“한국 각료 다수가 살해된 1983년 10월 9일의 랭군 폭발사건도 그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서독 Die Welt지, 위와 같음)

“새 독재자(김정일)의 수범도 그의 부친의 수범과 대동 소이하여 거듭된 대남 테러 활동, 요인 납치기도,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행위 등은 대부분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서독 Le Journal Geneve지, 84.8.8일자, 「위대한 수령을 경애하는 지도자가 계승할 판」이라는 제하의 기사내용)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호사생활과 부화방탕한 성격에 대해서는 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낭비벽이 심한 김정일은 평양 대동강구역 의암동에 있는 초호화판 관저 이외에도 중구역 창광산, 보통강구역 서장동, 동평양 초대소 지역에 3개의 호사스런 비밀관저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송도원, 삼지연, 묘향산등 10여곳에 별장을

두고 있다.”(귀순자 증언, 위와 같은 책. p32)

“김정일은 애첩이나 측근자들이 해외 나들이를 할 때 기분이 나면 수만 달러를 부담없이 준다.” (귀순자 증언)

“특히 1982년 10월에는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인「닛산에」 방탄장치가 된 초고급 호화판 승용차를 비롯 특수 경호차등 총 7억엔 상당의 차량 99대를 제작 주문함으로써 세인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귀순자 증언)

특히 김정일은 비정상적 호전성과 포악성 뿐만 아니라 호색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일본 동경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상공회 회원(김식경씨의 방문 수기 중(82.12.17))에서 “김정일의 부화 방탕스런 생활”에 대한 몇가지 만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 당비서의 비행은 충격적이었다. 김정일을 “타고난 영웅” “높은 덕성의 소유자” “유일한 후계자”라고 하나 이는 터무니 없는 거짓과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일이 횡포한 나머지 품행이 병적으로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감히 있을 수 없는 부녀폭행까지 서슴없이 자행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김정일은 「국립 만수대 예술단」이나 그 외의 가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배우와 여성가수중 자신이 좋아하는 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손을 댔다.”

“여배우와 여성가수만이 김정일의 노리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이나 정부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인이나 딸도 김정일의 변덕스런 유흥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일이 비일 비재했다. 파렴치범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

※ 김경련 전 부총리 딸이 그와 같은 김정일의 노리개 여성으로 선택되어 “무자비한”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당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김정일의 영업행각은 1973년 경부터 시작된다. 예술전문학교 출신중 미모를 갖춘 졸업생 30여명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면에서 김정일의 욕심을 채워주기엔 족한 팔동신 미녀들이다.”

“1976년 경부터는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서구 등지에서 암약하는 공관원 및 중앙당 연락부 소속 공작원들로 하여금 외국여성(배우, 호스티스 등)을 납치, 유인하여 평양시 소재 연락부 초대소 등지에 기거시키면서 영업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측근들로 부터 전해지고 있다.”

“김정일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먹는 정력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업유희를 즐긴다고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철저한 성의 노예가 되고 있으면서도 영광스럽게 아는 “김정일 여자들”에게는 명절 때가 되면 선물을 하면서 치하하고 있다. 그 선물이란 일본제 팬티, 브레이어, 향수, 스카프, 손목시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김정일의 영업행각은 다량의 도색영화를 수입하여 은밀한 쾌락과 함께 성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 났다.”

“로마에 있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주재 북한대표부(78년 10월 개설. 7명 상주)는 1984. 4. 17~5. 2사이에 이탈리아 영화제작 수출업체인 스페스 M.G사로부터 35mm도색 및 폭력영화 필름 70편을 구매하고도 대금 지불을 당초 예약대로 이행치 않아 큰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탈리아 스페스M.G사에 동 필름 구입대금 114,000불중에 96,000불을 미불한 채 잔금 지불을 지연시키자 스페스M.G사가 FAO본부의 북한 요원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발송함으로써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이 구입해 간 필름은 “Hot Mood” “옷을 벗자” “잘못찾은 침대”, “바나나 공화국” “벌거벗은 미인들과” “성의 세계” “나를 꼭 잡아 주오” “나는 당신의 뜨거운 폭력을 원한다” “행복한 죄수” “작전 특공대” “쾌락을 위해 강제된 사람들” 등이다.”

“FAO는 북한이 제3세계에 대한 식량 및 원조를 하는 대신 도색 영화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이탈리아 「일 조 르날레」지, '84.7.15일자)

이처럼 북한의 폐쇄된 사회 속에서 일반 주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고도 파행적인 작태가 김정일에 의해 연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모든 보도매체들은 이 같은 김정일의 무분별하고도 광적인 행위를 비호라도 하듯이 김정일이 마치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숭고한 품모와 덕성을 지닌 인민의 자애로운 스승”인양 날조, 선전하고 있다.

즉 김정일의 「품모와 덕성」 미화를 위해 이른바 <김정일 덕성실기>라는 책을 발간하여 그가 어린 시절부터 김일성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효성이 지극했으며,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에피소드를 조작하여 수기식으로 조작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김정일 덕성실기>에 대한 학습을 전주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지지를 획득코자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율배반적인 북한 현실이다.

승계의 위기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그들 나뉠대로의 권력세습논리를 정립시킨 가운데 김정일에 대한 각양 각색의 우상조작 정책을 전개해 왔으며, 이는 김일성과 동격수준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수행과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크고 작은 일들은 김정일 치적으로 돌림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함께 명실상부한 실권적 지위를 확보하고 총력을 집중시켜 왔다.

그럼에도 김정일 세습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증후군이 그들의 공식논조상에 발견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따라서 80년대 이후의 최근 공식논조상에 반영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불합리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반 김정일세력의 실재를 반증하는 논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1983년 2월 북한은 방송을 통해 「혁명의 승계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의 유지”라고 전제하고, “혁명의 배신자, 음모자, 야심가들의 책동을 철저히 색출, 분쇄할 것”을 반복 촉구하였다. 또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여러가지 잡사상의 침투를 막는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불순분자들의 준동을 철저히 색출,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로동신문(83. 2.26)은 시·군 인민회의 선거와 관련한 논설기사에서 “적대분자, 불순분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파괴, 암약책동의 결탁자”로 매도하고 이 같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반대투쟁을 위해 「인민정권의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법무생활 강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적대적 요소들의 준동을 막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계급적 원수들의 반항을 제때에 진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의 41회 생일(83. 2.16)때 평양방송은 “균전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노동계급 및 당의 운명과 혁명의 승패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모두 떨쳐나서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높이 받들어 당의 통일, 단결을 보다 강력히 전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로동신문(83. 5.11) 논설은 “혁명의 통일단결이 대를 이어 고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와 요소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혁명의 변절자와 종파분자들」은 그들 목적실현을 위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비타협적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 김정일을 중심으로 「강철같은 규율」을 형성해야 된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된 논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은 “혁명의 배신자, 음모

자, 야심가들, 적대분자, 불순분자, 계급적 원수들, 반혁명 잔여분자, 당의 통일단결을 방해하는 모든 현상, 적대적 요소들, 혁명의 변절자들과 종파분자들, 외부세력과 결탁한 내부 원수들”을 철저히 색출, 분쇄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그들 체제내부에 이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자료가 되고 있다 할 것이다.

둘째로, 그들 내부에 불건전한 사상적 조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동신문(83. 1.3) 사설은 로동당 내부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단결의 중심, 하나의 영도”만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모든 당원, 근로자들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지도 아래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영도를 적극 받아 들여 당중앙이 의도하는 대로 혁명을 전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함으로써 당내의 분열과 갈등의 내재를 시사하고 있다.

중앙방송(83. 1.6) 해설은 당과 대중을 향해 「사상적 통일단결」을 요구하고 김일성과 당을 중심으로 “전체 인민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단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편향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편향없는 충성’이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 선전기관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고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려는 혁명적 신념에 기초한 반당적 사상조류를 철저히 타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로동신문(83. 2.9) 논설은 이례적으로 군내부의 ‘순결성’유지와 ‘사상적 통일단결’문제를 거론, 군내부에 반김정일 세력이 잠재하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특히 군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김일성과 당중앙을 위해 한목숨 바치는 사상, 정신상태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선전기관들은 “계급투쟁을 통한 불순분자, 적대분자 제거”와 “주민들 속에 남아 있는 개인, 이기주의 등 사상잔재 타파의 범무생활 강화를 통해 반혁명,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뿌리뽑기 위한 정치사업 강화”를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당, 군부, 관료, 전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일사상 확립, 대를 이어 충성, 사상적 통일단결”을 촉구하는 한편, “사상적 편향, 반

당직 사상조류, 종파분자들의 반당적 행위, 불건전한 사상조류, 반동사상과 반 혁명적 사상, 반혁명, 반사회적 요소”등을 타파할 것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요구하였다. 이 같은 논조는 반체제적 정치의식이 잠재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젊은세대들의 사상적 회의 및 혼란을 암시해 주는 논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로동신문(82. 11.30)은 “착취와 압박을 받지 못하고 혁명의 시련도 겪어 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골간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표시하면서, “혁명화되지도 단결되지도 못한 젊은세대들을 로동계급의 모형대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당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과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제고 투쟁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평양방송(82. 12.4)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혁명의 동요분자, 변절자들의 온갖 책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김정일에 대를 이어 충성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당이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이 나타나 당과 혁명에 도전해 나서고 있다”고 경고하고 ‘당의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로동신문(83. 1)은 “각급 당조직들에서 세대교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혁명관이나 충실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는다면 낡은 사상과 귀족화, 부르주아화에 물든다”고 경고, 젊은 세대의 사상동향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최근 수년간에 걸친 광범한 세대교체작업을 강행, 신진세대들을 대폭 등용한 바 있으나 그 결과, 이들 젊은 세대들의 ‘사상적 나약성’에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3. 경제체제와 현실

경제체제의 특성

경제운용과 현실

3. 경제체제와 현실

경제체제의 특성

경제체제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용생산수단을 사용하는 조직, 즉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방식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세가지 요소는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행동원리, 경제주체가 목적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일정한 방법,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직, 또는 질서 등으로 대별(Sombart. W.)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경제체제를 경제정신,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경제적 배분의 결정기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제도적 특징은 사유재산제도, 경제활동의 자유, 이윤추구의 경제 등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 사상이나 근본원리의 측면에서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영리주의를 기초로 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제도의 기반 위에서 가격기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합리적인 이윤추구를 경제활동의 원동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활동의 주체는 개인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제 모순(소득의 불평등, 실업, 빈곤, 불경기 등)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바탕으로 경제의 계획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란 물적 생산수단이 공공당국 혹은 자유로운 조합의 소유로 되고, 생산된 생산물은 사회구성원의 욕망을 직접 충족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배분되며, 경제는 중앙계획기관이 수립한 계획

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경제체제론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체제의 유형은 첫째로 사회적 부가 어떠한 형태로 소유되고 있으며, 둘째로 조정(調整) 메카니즘이 어떠한 내용인가의 두가지 기준에 의해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부에 대한 소유제도는 다시 사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로 구분되며, 다음의 조정 메카니즘은 명령과 시장, 그리고 이 양자의 혼합이란 세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유형은 사적 소유에 근거한 명령경제, 사적 소유에 근거한 시장경제, 사적 소유에 근거한 혼합경제, 사회적 소유에 근거한 명령경제, 사회적 소유에 근거한 시장경제, 사회적 소유에 근거한 혼합경제 등 여섯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같은 경제체제의 유형분류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소유에 근거한 명령경제 또는 지령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스탈린체제하의 소련경제 및 사회주의 경제개혁 이전의 동구경제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명령경제체제의 특징은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 되어 있어 자본재 시장이 없을 뿐더러 소비재시장도 가격 메카니즘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으며, 일체의 경제적 조정은 경제계획당국, 즉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최고권력자를 정점으로 하는 계획관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명령경제에서는 경제적 실상에 적절한 정책이 강구되기 보다는 경제적 미래상에 기여할 정책이 계획 메카니즘을 통해 실천되어 가는 특이한 경제체제를 형성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지령경제체제 하에서는 로동당의 정치목적 수행이 우선되며, 각 기업의 원자재 구입, 노동력의 동원에서부터 생산 및 제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행위는 중앙계획당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조정,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강권적, 중앙집권적, 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결함과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1) 모든 경제적 결정권이 관료기구의 정점 또는 극소수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료조직의 말단에서 포착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변질되고 그 결과, 그릇된 결정과 조정을 수반하게 된다.

(2) 정보채널의 중복을 들 수 있다.

정확도를 결여한 정보(통계숫자 등)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대책이 왜곡되고 시기를 상실함으로써 결정권자는 정상적인 정보채널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한다.

따라서 경제행정조직 외에 이를 확인하고 감시·통제할 수 있는 경찰행정조직, 당조직, 비밀사조직(3대혁명 소조 등)과 같은 감시적 조직을 동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복되는 제 정보가 혼란을 가져오고, 감독기능이 다원화되어 경제행정의 문란과 비효율을 자초하며 다원적 정보망을 유지함으로써 과다한 지출이 요구된다.

이 같은 현상은 김일성이 스스로 ‘현지지도’란 명목하에 생산현장에 나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보고체계의 정착도와 신뢰도를 체크하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 권력집중의 악순환을 들 수 있다.

경제부처와 당 또는 김일성 개인의 비공식적 정보채널이 기능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경제적 행위에 대한 결정은 모든 정보채널이 최종적으로 권력의 핵심 중앙당 정치국과 김일성, 김정일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크고 작은 모든 경제행위, 즉 생산, 재배, 수매, 가공, 유통, 보관 소비 등에 관한 일체의 과정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여 지도록 되어 있다.

(4) 독단적 편견과 함께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에 대한 신뢰도의 결여는 점차로 결정권자의 행동유형을 변화시켜 경제적 현실, 즉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사유(思惟)의 세계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명령을 내리게 한다.

이 같은 이유로서는, 경제적 실체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자신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특히 명령경제체제는 대체로 광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 창안 제시되고 있는 북한의 각종 노력경쟁운동과 경제관리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 「청산리방법」 등은 투입된 노력과 자원에 비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독단과 합리성 상실의 실증적 표본이라 할 것이다.

(5) 경제운영의 경직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운영의 결정권자가 일상적인 경제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차질도 없이 관철될 것을 강요하게 된다.

이 같은 경직화된 현상으로 인해 모든 경제부문에서의 초과달성을 미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와 낭비, 합리성 결여 등의 비효율성을 자초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6) 경제적 노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경제적 결정권이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결정에 대한 평등한 참여가 주는 유인(誘因)이 전무하고 「능력에 따른 분배」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질적 자극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운동과 현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에 의한 중앙집권적 지령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폐쇄적인 자립경제(자력갱생)노선

을 견지한 가운데 중공업 우선책과 국방·경제 병진책을 강행하여 왔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투자와 산업간의 구조적 불균형, 자원의 낭비, 투자재원 부족, 주민생활의 낙후 등, 경제·사회면의 구조적 제결함과 함께 경제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말해 김일성 유일독재지배체제에 의한 경제적 독점은 모든 주민(경제활동인구)의 자주성을 말살시키는 가운데 무관심과 경제활동에서의 “소극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등 부정적 사고를 조장시켜 경제의 비능률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본능적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유인이 결여됨으로써 자발적 노동참여가 불가능한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동시에, 제품의 질적 조악 및 낭비현상, 그리고 당면 경제계획의 만성적인 시행착오를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이 북한의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로 인한 재결함은 경제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경제침체의 지속은 주민생활의 궁핍을 초래할 뿐이었다.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팍박상에 대한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협동농장 여성들은 3~4개월동안 위생대용 천을 한번도 공급받지 못해 종이조각이나 이불솜을 뜯어 사용하고 있다.”

“무역선을 타는 선원들은 외국에서 외출할 때 피죄죄한 옷에 김일성의 영상휘장을 달고 와서 외국사람들로 부터 반축을 사고 옷음거리가 되고 있어 질 좋은 옷을 공급해주도록 상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규정대로 한다면 세탁비누는 1개월에 1인당 $\frac{1}{2}$ 개씩 매세대별 연간 30~40장의 세탁비누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연간 3~4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빨래다운 빨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자라는 숫자는 암암리에 상점판매원이나 당간부 등 권세가 센 사람을 통해서 암거래로 사서 해결한다.”

“1973년경 김일성은 “옛날 일본사람들은 키가 작아 그들을 보고 우리가 발발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조선사람들이 발발이가 되었다”고 말하고 「키키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시

한 바 있다. 그 지시에 따라 인민학교 학생들에게는 영양효소제인 「리진」, 「키크기은단」을 공급하는가 하면 다시마 같은 것을 급식하게 되었다. 한편, 농구, 배구, 달리기, 철봉 등을 「키크기 운동」종목으로 정해 놓고 있다.”(군사연구, 84. 9월~85. 1월)

—수재물자 인수시(1984. 9월)북측요원들의 복장 실태—(북한의 실상, 고려원, 1986. 7. pp. 99~100)

“북적 대표단원, 기자들은 대부분이 새로 맞춘 양복이었으나 색상이 단조롭고 급조한 옷을 착용하여 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옷소매가 짧아 늘린 자욱이 보인 사람도 있어 천이나 봉제기술이 극히 낙후함을 보였다.”

“오늘날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심각하여 일반인민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쌀과 잡곡을 8:2의 비율로 1인당 1일 700g을 배급받기로 되어 있으나 전쟁 비축미, 절약미 등으로 하여 150g을 떼어내 결국 주민들의 1일 식량은 고작 550g~600g이 불과하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대부분이며 영양실조에서 오는 피부병을 비롯 간장병, 위장병, 결핵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피부병 환자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즉시 병원을 찾아도 제대로 약이 없어 병원에서는 “개라도 잡아 먹으라”고 말하는게 고작, 북한주민들은 그래서 피부병을 「개병」이라고 빈정거리고 있으며 극도의 영양실조, 특히 단백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뱀, 개구리를 잡아 먹는다고 한다.”(통일일보, 동경, 1983. 2.5)

이와 같이 북한은 극도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마침내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경제사업 및 무역 확대」 방침을 제시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경제기술 협력에 주력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1984년 9월 8일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등 5개부문을 중심으로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한 이른바 「대의 합작투자경영법」을 제정, 대서방 합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합영법」은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극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4. 사회적 일탈과 부조리 현상

사회적 일탈행위

사회부조리 현상

주민의 불평등 구조

4. 사회적 일탈과 부조리 현상

사회적 일탈행위

관념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사회와 경험적으로 전개되는 현실사회 사이에는 현격한 갭이 실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일탈행위에서 더욱 뚜렷이 입증될 수 있다. 특히 가치의 획일화를 강조하고 사회적 일탈화의 완전 배제를 전제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체제에서 이 같은 실재적 현상들을 도출해 내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의 사회학자들은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사회범죄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질에 의하여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사회범죄의 기초를 이루는 현상과 과정은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그리고 일상적인 과거의 잔존물의 영향에 의한 결과이며, 그것은 물질적 자원의 발달과정과 결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닌도 “사회관계의 규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의 근본적인 요인은 대중의 착취, 그들의 궁핍과 빈곤이다”라고 하여 본질적 문제해결에 접근을 회피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반사회적 작풍의 원인이 봉건적·부르주아적인 사상의식의 잔존, 당·행정기관 간부들의 대중 영도방식의 미숙과 혁명적 경험의 부족 등에 있다”고 주장, 지엽적 측면에서 사회 일탈현상의 원인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일탈화의 요인을 그들의 사회체제나 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공통적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오염」 또는 「잔재」라고 하는 인식에 의존하고 있다. 즉 「오염」의 개념은 “타락해 가고 있는 서구의 부르주아적 영향”을 의미하며, 「잔재」의 개념은 “전 시대의 착취적인 사회경제형태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의 중간으로 침입해 온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범죄는 선행하는 사회경제 형태에 연유한 것이지 사회주의의 본질로 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다”는 것이며 “과거의 잔재는 이러한 현상을 상상해내는 사회적, 경제적 원인이 소멸해버린 이후에도 장기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적 일탈행위의 근원을 “낡은 사회질서가 붕괴된 이후에도 잔존하는 과거태도의 잔재”라고 가정하는 「잔재이론」 내지 「문화지체론」을 고집함으로써 공산사회 자체의 모순을 스스로 폭로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공산주의적 인간성과 문화성 등을 그들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계층과 사회저변의 제 부문에서는 크고 작은 사회적 일탈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즉 각종 범죄를 비롯하여 이른바 「김일성 교시」 학습의 기피현상, 각종 조직생활의 이탈, 불평 불만의식의 토로 및 절도, 소매치기, 강도, 강간, 살인, 불량서클 조직, 불온낙서행위 등이 그 대표적 실례들이다.

첫째, 북한에서는 정치적 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당 유일사상 위배행위」라 하여 날조된 김일성 투쟁 역사에 대한 비방, 김일성에 관한 각종 출판물 및 초상화 훼손, 김일성 지시의 위반행위 등을 비롯한 일체의 반당·반혁명적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역행하는 행위」라 하여 유언비어 유포, 혁명역사

에 대한 비방 및 태만행위 등도 이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당정책 순결성 훼손 행위」라 하여 각종 구호판 위치의 임의 변경, 각종 행사시 구호제창과 박수기피행위, 당원증, 맹원증 분실의 예도 이에 속한다.

둘째로, 경제사범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부족한 물질에 대한 욕구충족의 갈망과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생활인식에서 비롯된 절도, 강도, 횡령, 착복, 사기 등의 각종 경제관계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같은 경제사범은 주로 물품과 금전을 취급하고 있는 경리담당원, 매점원, 배급 및 수매사업소 종사원이나 소속기관 단체의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강도, 절도는 현금보다는 오히려 물품절취가 대부분이며 이중에서도 식량, 옷감등 생활필수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째로, 인신침해범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각종 감시·밀고체계로 인해 악화된 인간관계와 치정 등의 원인으로 폭행, 상해, 살인사건과 같은 인신침해사건이 발생하고 있긴 하나 성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발생 요인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연애와 결혼에 대한 당과 조직의 통제, 그리고 부자유스러운 남녀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당·정기관이나 근로단체, 협동농장의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간음, 간통의 경우는 당·정기관 또는 직맹, 사로청, 농근맹과 같은 근로단체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입당조건이나 작업환경이 좋은 작업장 배치를 미끼로 사용하거나 직권을 이용하여 유혹의 미끼로 구하기 힘든 의류나 화장품 등을 선사하기도 한다.

또한 강간, 윤간의 경우도 당·정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고 강제추행의 경우는 특정범죄로 취급, 처벌하고

있다.

매음의 경우는 부양가족의 생계유지와 당원증을 얻기 위해 매음행위를 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외국 외항선의 입출입이 빈번한 항구에서 외국 선원들로부터 의류나 화장품을 받고 매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네째, 청소년 비행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부자」 후계체제의 구축과정에서 가일층 강화되고 있는 사상 교양과 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계층에서 각종 노력동원 기피, 상습적인 불량배 싸움, 강도, 절도, 소매치기 등의 사회적 일탈행위가 빈발하고 있음은 물론, 김일성, 김정일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사건들이 증대하고 있다.

(북한총람, p. 919)

이들 비행 청소년들의 성분을 보면 계모 또는 편모슬하이거나 부모의 정치적 성분 불량 등 가정환경이 좋지 않는 자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당·정기관 간부 자제들도 있다.

북한에서는 이같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탈행위가 자유주의 사조의 유입을 통하여 「김부자」에 대한 반체제적 성향으로 확대 발전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각종 보도매체를 통한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함과 동시에 학교에서는 학부형회의, 직장에서는 종업원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입체적으로 청소년 계도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온갖 책벌과 통제를 가함은 물론,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일단 비행이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산간벽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의 강경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총람, p. 920)

사회 부조리 현상

북한은 조직적 통제와 유일사상체계 및 전주민에 대한 ‘사회주의적 생활양

식'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사상교육을 제도화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 은덕으로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 저변에는 구조적 제 모순과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때문에 사회적 부조리 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북한의 사회적 부조리의 특성은 그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또는 정책수행과정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과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하게 일반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조리의 양상이 그들 특유의 폐쇄사회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화되어 있지 않고 내면적으로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치유될 수 없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고질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부조리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의 세가지 측면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부조리는 당권우위의 사고방식과 장기간에 걸친 권력의 화석화(火石化) 현상에 기인한 상호모순과 「김부자」 유일독재체제의 폐단에서부터 연유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입증시켜 주는 예로서, 김일성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농업위원회 일꾼들이 허풍치기를 하여 당을 기만하고 이삭이 피기 전에 예상 수확고를 측정, 공명심에 젖어 과장, 보고하여 당정책 수립에 혼란을 조성하고 하부 농업일꾼들은 상부의 지시를 관철하지 않고 책만 끼고 다니며 지시와 호령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고 있다.”(1973년 1월 농업일꾼대회에서의 연설)

“일부에서는 동지들의 결함을 싸고 돌며 가족주의적으로 행동하거나 무원칙하게 반대파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파벌주의를 조성하고 개별적 간부에 대한 과대평가 및 의의없는 선물수수 등의 아부 아침행위로 보신주의가 성황하고 기강이 해이 되어 있다. 또한 정분, 안면관계로 불건전한 자들을 간부로 추천하고 선발하여

62 사회적 일탈과 부조리 현상

배치함으로써 인사부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노간부들은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관본위주의에 입각하여 새로운 지침에 대해 안일 해이하고 일부 당원들은 보신주의와 소심성으로 결함을 보고하지도 않는다.”(1975년 3월 공업열성자회의 연설)

특히 정치적 부조리의 유형으로서는 보신주의의 소심성, 무사안일주의적 경향성, 정실에 의한 인사처리, 인신공격, 모략중상,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인영웅주의, 자유주의 등의 사고방식, 기술신비주의적 작태, 당회의와 당생활에의 불성실, 허위보고, 책임회피, 공명위주로의 사업수행, 형식주의와 요령주의의 사업태도, 문서와 회의에 의한 당사업의 요식화, 번잡한 형식에 얽매인 사업작풍, 지위와 특권 남용, 주관주의의 독선적 명령, 뇌물을 주고 받으며 아침을 떠는 행위, 형식주의적 사업진행, 당조직의 규율 해이, 관료주의적 행위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둘째로, 경영관리의 부조리를 들 수 있다.

이는 무모한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과중한 노동량 책정,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인한 산업부문간의 불균형 심화현상, 「자력갱생」원칙의 한계성, 행정적 경영관리의 경직성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같은 원인 또는 행태적 사례로서는, 공공재산의 유용, 횡령, 낭비, 착복, 전용과 자기 소속만을 위하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개인주의 의식의 팽배로 상호협력 부족, 상품배정의 형식적 집행 및 평균주의적 성향, 책임회피를 위한 허위보고 상례화, 무조건적 맹종의식으로 인한 창의력과 기술혁신 부족, 작업배정에서의 불평등, 물자 부족, 자재공급의 차질, 노임체불현상의 빈발 등이 있다.

세째로, 사회적 부조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난의 지속과 함께 생활의 궁핍에서 오는 물질적 욕구 충족의 불만, 사적 소유의 불인정, 각종 학습 및 조직생활의 강요, 과도한 노력동원, 김일성 유일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적 통제, 사회적 경직성의 제 요인에

서 비롯되고 있다.

예컨대, 전반적으로 의욕이 상실된 가운데 무사안일의 작풍과 형식적 사업 집행, 공공재산의 관리 소홀은 물론 소극적 태업과 작업에 대한 태만, 노동기피현상 심화, 범규범과 규정위반 사례 빈발, 의타주의적 경향성, 불법 암거래 및 상품유통 등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의 불평등 구조

북한의 주민생활은 계층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차등적으로 구분, 적용할 것을 제도화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삶의 기회는 두가지의 차원에서 양분될 수 있다. 즉, 특권층인 핵심계층과 일반주민들 사이에는 당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 까지 당원자격과 대학진학, 직장배치, 정치·사회적 진출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차등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사회내부에서는 체제 동조적이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소수의 계층이 군림하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비동조적 의식의 갈등 속에서 현실에 대한 뿌리깊은 불만감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계층이 존재하는 등 불평등 구조의 사회적 갈등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북한의 특권계층이 향유하고 있는 제도적 보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계층들은 「김일성 친위대 돌격대」로서 사상적으로 보장받는 계층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정치적 직위를 독점하고 김일성 족벌체제 유지를 위한 선봉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핵심계층들은 책임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외부적 간섭과 통제가 적은 반면, 일반주민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군림하게 되는 특권을 누린다.

셋째, 특권층은 경제적 혜택을 부여 받는 것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봉급의 우대, 특별병원 사용, 10호상점 이용 등의 권한을 가지며, 특히 10호상

점은 특권층의 전용상점으로 외국상품 등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네째, 특권층의 자녀들은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혁명유자녀 학원 등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장래를 보장받는다.

다섯째, 특별별장, 요양소, 휴양소 등 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주민들, 즉 대다수의 소외계층들은 실제적으로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당한 채, 좌절의식 속에서 생물학적 삶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주민들은 하루 3시간 이상 김일성, 김정일학습(당정책학습, 생활총화, 회상기 발표회, 독보회 등)을 반복적으로 하며, 「김일성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산주의 인간」으로 주조될 것을 강요받는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조직을 집단화하고 개인은 거대한 집단사회에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역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의사를 봉쇄, 집단적 동조를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생활의 통제와 끊임없는 노력을 강요당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통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자유, 욕구, 행동, 희망 등을 포함하는 전 생활영역과 가치관, 선악관 등의 정신영역까지도 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북한에서의 통제 노력의 강요는 주민들의 사상과 의식구조를 획일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동원능력을 확대시키고자 함과 동시에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억지기능을 제고시키려는 조치이다.

일찌기 북한은 1958년 10월 「천리마운동」을 제창하면서 “천리마의 기세로 일한다면 1965년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옛날 부농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선전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의 북한 현실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마저도 충족하지 못한채 기본권에 대한 제한만을 더욱 강화하면서 갖가지 명목의 노력동원 운동을 창안, 전개함으로써 삶의 가치에 대한 질적 저하와 함께 계층간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적 일탈화 현상을 자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하고 있다.

5. 교육이론과 실제

공산주의 교육관

교육이론과 정책

교육제도와 운영

5. 교육이론과 실제

공산주의 교육관

교육의 본질은 인간형성에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국가이념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지향, 그리고 삶의 이상과 조건에 따라 결정지워진다.

따라서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의 목적 설정도 그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 바람직한 인간상은 학습자의 현실의 모습에 근거하되 형성결과로 예견되는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하는데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다.

흔히 거론되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중 시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예로서는 신라시대의 「화랑」, 중국의 「군자」(君子), 일본의 「무사」(武士), 고대 인도의 「보살」(菩薩), 중세유럽의 「기사」(騎士), 프랑스의 「오네뜨」(誠實人), 영국의 「신사」, 미국의 「개척자」 등을 들 수 있다.(북한교육론, p. 13)

공산주의 교육학자들은 교육의 이념을 논할 때는 의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말한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격”의 주장을 인용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공업시대에서의 ‘노동의 분할’ ‘노동자의 부분적 기능’을 공격하고 나서 “부분적 개인 대신에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번갈아 자기의 활동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격의 육성”을 내다 본다 고 하였다.(마르크스·엥겔스 전집 23권, p. 512)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의 부분품화, 상품화’에 반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엥겔스는 <공산주의 원리>에서 “사회전체가 공동적, 계획적으로 경영

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발전한 소질을 가지고 생산의 체계전체를 전망할 수 있는 인간을 필요로 하며, 교육을 통해 생산의 체계전체를 젊은이들이 재빨리 체득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피력하였다. (F. Engeles, Grundsätze des Kommunismus 전집 4권, ss. 375~376. 북한교육론, p. 35)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격’이라는 개념은 지금껏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 교육학의 핵심적 개념으로 주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인(whole man)교육이라는 개념도 마르크스·엔겔스에 의해 최초로 제창된 ‘천재적 예언’으로 오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교조들의 예언이 오늘날의 공산권 실정에 조명해 볼 때 어떠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특히 최초의 제창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몇가지 예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즉 레닌은 <청년동맹의 임무>라는 책자에서 “지금까지의 학교는 전면적인 교양을 갖춘 인간을 만드는 곳이며 또한 과학 일반을 가르친다고 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이 전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학교는 전적으로 계급차별에 입각한 것이어서 부르주아지의 자제들에게만 지식을 가르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일본 공산당 중앙위 선전부(편), 선전·선동, 동경, 1969, p. 493)라고 피력함으로써 그들이 주창한 교육개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페스탈로찌(J. Heinrich Pestalozzi, 1746~1824)는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근본적 힘인 정신력, 도덕력, 신체력, 즉 머리와 가슴과 손의 세가지 힘을 조화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음”을 마르크스·엔겔스 주장 이전에 이미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최종목표(자본주의 사회 붕괴, 전세계 공산화)를 달성하기 위해 ‘혁명과 투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함은 물론, 이를 주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상적 인간형’을 만들어 내는데 모든 힘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만드는 작업을 바로 교육이 전담해야 한다고 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그들의 정치적 필요와 지향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즉 계급투쟁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무장된 인간’이 필요하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기술적 인간’이 요청되고, 나아가 전쟁승리를 위해서는 ‘민족전통적 인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질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동시에 분할하여 강조하는데 편리한 용어로서 흔히 「새로운 인간」 또는 「새 형의 인간」(북한)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북한교육론, p. 37)

즉 소련의 경우,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을 위해서는 유아시절부터 ‘혁명의 아버지’라는 레닌에 대한 숭배교육과 공산체제의 미화 또는 계급의식과 조직적 규율을 주입시키게 된다. (인간상의 탐구, 교육학 연구전집(1), 동경, 1976. pp. 282~284)

그리고 ‘생산기술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지식의 전파는 물론, 「스타하노프」형 인간형성의 강조에 역점을 둔다.

※ 「스타하노프」형 인간이란 1925년 8월 30일 「스타하노프」라는 채탄노동자가 작업기준량(노르마)을 무려 14배로 늘려 기적을 창조했다 하여 이러한 모범을 따라 배우게 하는 의도적인 운동을 일컬음.

특히 ‘민족전통적 인간’이란 전쟁으로 대중을 동원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착안된 것으로 소련의 이른바 ‘영웅적인 슬라브적 인간’상도 제2차 세계대전에 즈음하여 주창,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기초와 방법론은 거의 유사하다.

레닌 대신에 「김일성과 김정일」, 「스타하노프」 대신에 수많은 「노력영웅」 칭호의 인간군상, 「영웅적 슬라브」 또는 「위대한 러시아」대신에 「주체의 조선인민」등으로 대체시켜 놓고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수법을 엿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교육은 계급투쟁의 수단으로서 또는 혁

명실천을 주도할 수 있는 인간육성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교육자는 “직업적 혁명가, 계급의식의 대행자, 정치적 선전·선동원”으로 전략하게 되는 것이며, 학교는 공산주의 인간을 양성하는 기본단위로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백한 논리로서는 맑스·엔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지금까지의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교육의 역사도 계급투쟁”이라고 지적한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 교육의 특수성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과 자본주의 체제의 타파에 주안을 두고 이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연습, 숙련 등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그들의 선전이나 선동 기능의 일부분, 또는 그의 한 수단으로서만 간주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간의 생산적인 힘과 상품의 개발이나 발달에 교육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강요하는 데에만 교육적 목표를 두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교육이론과 정책

우리의 교육이념은 자아실현을 통한 홍익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교육이념은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이념과 일치하며 또한 전통적 가치에 근거를 두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의 교육이념은 순수한 인간성의 개발을 부인하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질서도 부정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오로지 맑스·레닌주의의 유물론적 세계관에 따라 인간을 물질에 예속시키며 인간을 그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간주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인간이란 김일성과 당의 요구 및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을 말하며 그 명령체계에 예속될 것을 강요받는 인간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예증하는 논거를 살펴보자.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독창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로동당 규약 전문)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헌법 제 39조)

“새 세대들은 일반 기초지식과 함께 현대적 기술을 소유한 문명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일꾼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평양. 1961. pp. 35~36)

“우리들은 주체과학을 열심히 탐구하며 사회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려 지덕체를 겸비한 조선혁명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훌륭한 민족간부로, 수령님의 믿음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로동당 제5차 대회 축하문)

특히 북한에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소양과 자질, 품성과 태도에 대한 내용을 그들의 ‘당규약’, ‘사회주의 헌법’, ‘공산주의 도덕교양’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당규약 상에 명시한 (제4장 4항 “당원의 의무”조항) “새로운 인간이 갖추어야 할 품성과 성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모든 당원들은 유일사상체제로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가로 개조하며,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소유한 가운데 혁명적 학습기풍을 확립하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 하에서 로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본보기가 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처럼 당원들에 대한 의무조항을 설정한 것은 이들의 인격체계를 어느 일정한 「틀」속에 종속시킴으로써 그들 체제가 바라는 대로 목표지향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데 있다.

또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상에 명시된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조항)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행동양식을 간추려 보면, 집단주의 원칙이 모든 것에 최우선 할 것을 강조한 가운데, 노동을 「신성한 의무」로 규정하는 한편,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행동준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교육이념은 전주민의 “공산주의 인간 개조”라고 하는 목표에 귀착되어 있다. 또한 이 같은 교육원리는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부터 모든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구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모든 생활의 신조로서 준수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이상과 같은 교육 이념의 구현을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정책을 수립, 실시해 왔다.

현재 북한에서의 교육목표, 이념 및 그 정책의 핵심은 「사회주의 교육학」 5대원칙과 1977년 9월 5일 로동당 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교육체제」에 집약되어 있는데 그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서의 「당성과 노동계급성 원칙」이다. (사회주의 교육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29)

당성과 계급성 원칙은 “교육이 사람들을 당의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복무해야 하고 교육사업의 전 과정이 당에 대한 충실성 교양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이며, 노동계급성을 세운다는 것은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에서의 「주체확립의 원칙」이다. (위의 책, pp. 54~64)

교육에서의 주체확립을 위해서는 “자기나라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김일성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혁명적 세계관 교양을 강화하여 낡은

것, 반동적, 비계급적 현상들과 투쟁하는 혁명가로 육성해야 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막아 내고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투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혁명실천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북한문화론, “사회주의 교육체제”, 서울 북한연구소, 1978. p. 595)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하는 것은 “사람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이며 진리의 기준이고 이론발전의 추동력”이라고 그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네째,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원칙」을 들 수 있다. (위의 책, p. 596)

이 원칙은 “공산주의 건설에 쓸모있는 과학기술을 소유한 혁명인재를 육성하고 혁명적 세계관 확립을 위한 교육교양사업을 현실상황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시켜야 하며, 이의 실천방법으로서는 “학생들을 생산노동, 육체노동에 참여시키고 교육내용이 혁명실천을 반영한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의무노동제 실시와 각종 노력동원을 합리화 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사업과 조직생활의 배합원칙」을 들 수 있다.

이 원칙은 학교교육 자체만으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정치생활, 조직생활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혁명적 조직생활’의 방법은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수행해 나가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혁명적 각오를 가지도록 교양해야 하고 특히 비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pp. 596~597)

또한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과외활동을 조직(과학소조, 예술소조, 체육소조)토록 하고 학생 규찰대를 조직하며 웅변대회, 작문짓기, 과학토론회, 이야기 모임, 시 낭송 모임, 음악감상 모임, 예술경연대회, 영화감상 모임 등을 개최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김일성에 충실한 인간으로 교육할 수 있다”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이론, p. 238)

그 이후 로동당 6차대회(1980. 10)에서는 “청소년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갈 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대를 이어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당 조직들은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쓰라린 과거를 잊지 말고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끊임없이 미워하며 온갖 계급적 원수들을 때려 부수고 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건결히 싸워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 교육정책에 있어서 일반적 특징과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 이데올로기への 편향성, 교육활동의 조직화와 집단화, 기술교육 치중,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고도의 집권적 계획과 통제, 선전·선동 및 대중조직과의 밀착성, 고도의 폐쇄성, 교육본질 왜곡 및 내실 결여, 정책과 제도의 안정성 결여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교육제도와 운영

북한은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학교교육의 기본방향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당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당의 권한은 절대적이어서 학교내의 인사문제에 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학교내 당 세포조직의 권한이 학교의 최고책임자인 교장의 권한을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 관리의 형식상 책임자는 교장이 지게 되지만 실제적 권한은 학교 「초급당 위원회」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학교교육 체계는 그 성격상 일반학교, 특수학교, 성인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학교의 유치원은 2년제로서 만4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이들 유치원은 낮은 반, 높은 반으로 나누어 높은 반은 의무교육제도(11년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인민학교는 4년제로서 설치기준은 도시지역에 1개교, 농촌지역에는 리단위에 1개교를 설치하고 있다. 수업은 통상 2부제를 실시하고 45분 수업을 한다. 학비는 무료로 되어 있으나 학용품, 교과서 등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가축사육, 폐품수집 등을 통해 조달하는 한편, 지역별 후원금 및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일본 군사연구, 84년 12월호)

“어느날 학부모회의(고등중학교 5학년)에서 “학교운영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돈을 내야 된다”고 하기에 관유리 대금을 떠맡아 지출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돈보다 현품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는 돈이 있어도 물품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각 공장 기업소에서 물품을 훔쳐와서 학교에 바치므로 부조리가 부조리를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다.”

인민학교에서의 시험은 1년에 2회(학기말) 실시하며 평가는 10점 만점제로서 최우등(9~10점), 우등(7~8점), 보통(5~6점), 낙제(4점 이하)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학급별로 담임지도하에 매주 토요일에 한 주일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금후 생활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발표케 하는 생활총화시간을 갖고 있다.

고등중학교는 중등반 4년, 고등반 2년의 6년제이며 설치기준은 농촌 1~2개, 리·도시 1개 동에 1개교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1개 학급은 50~60명이고 1개 학년은 5~6개 학급으로 편성되며, 입학시 편성된 학급 및 담임교사는 졸업시까지 계속되는 것이 상례이다. 모든 학생들은 「김일성 연구록」(적색 노트)이라는 학습장을 년 1회 검열을 받아 생활기록에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일반대학은 4~6년제이다.

북한 대학생의 대부분은 2년이상 생산노동에 종사했던 경험을 가진 자들이 입학하게 된다. 대학에 들어 와서도 학기중 일정기간 동안은 학교공장, 산업공장, 기업소, 농장, 목축장 등에서 생산노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대학입학 자격은 당 및 정권기관 간부 자제와 극소수의 우수한 학생 및 특정학교 지방생을 제외하고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난후 3년이상 군대에 복무하거나 공장이나 협동농장에서 생산활동을 한 연후에 「사로청」조직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선발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진학유형에 따른 비율은 보통 제대군인이 약 70%, 직장재직자가 약 20%, 특수계층의 고등중학교 졸업자가 1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더우기 북한의 대학 입학자격에 관한 규정에는 “대학입학 자격의 소유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하고 계급적 각성이 높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출신성분에 의한 사상성 위주의 대학입학 추천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상성 위주의 대학진학제도가 뿌리깊은 불신과 내외의 비난을 초래,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어 80년부터 시험제도를 부활, 소속기관 또는 학교의 추천외에도 해당 대학의 본고사에 합격을 해야 대학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시험제도는 오로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제도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성분이 불량한 학생들은 예외없이 제외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대학 졸업자에게는 해당자격이 주어지거나 인문사회계에서는 전문가 자격을, 이공계에서는 기사자격이 부여될 뿐 학위제도는 없고 연구원 과정을 이수해야 학사학위가 부여된다.

우리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은 3년제이고 우리의 박사과정과 같은 박사원이 2년제이다.

북한의 교육제도에서 특수학교로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같은 특권층의 자녀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무용, 음악, 조형예술 등의 예체능계 학교가 있다. 이 학교들은 거의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중학교 과정까지 11년제로 되어 있다.

이 밖에 7년제의 외국어 학교와 4년제의 체육학교도 특수학교에 속한다.

성인학교로는 「맑스·레닌주의 학원」 「김일성고급당학교」 「공산대학」 「인민경제대학」 「국제관계대학」 「사로청대학」 등과 각종 「군관학교」가 있다.

북한의 외국어 교육에서 특기할 사실은 교육목적의 하나가 전쟁 준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1971년 2월3일 김일성은 「도·시·군의 공장 기업소 대학 당위원회 및 사로청 위원장회의」에서 “우리는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싸울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청년들이 영어와 일어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몇 마디씩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청년들이 영어와 일어를 한 마디도 모른다면, 앞으로 전쟁마당에서 적들을 붙잡아 놓고도 처리하기 곤란할 것이다. 청년들은 누구나 다 영어와 일본말로 <손들어>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쏘지 않는다>는 등의 간단한 군사용어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군사용어 교육지시에 따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의 학생 군사교육은 전체학생을 정규무력의 후비대로 양성한다는 방침하에 유치원 시절부터 「병정놀이」, 미군표적에 대한 「사격놀이」등을 실시함으로써 군사훈련을 체질화하여 왔다. 즉 인민학교 2학년부턴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은 「소년단」 조직에 망라시켜 집총동작, 사

격조준연습, 소총분해 결합등의 기본적인 군사교육을 습득케 하고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 5~6학년생(14~15세)들을 「붉은 청년 근위대」라는 학생 군사조직에 묶어 교내 군사교육, 즉 정치학습, 전술학, 화기학 등 연간 120시간을 실시하고 재학중 년1회 1개월간의 입영집체훈련으로 실탄사격과 소부대 전술훈련을 습득, 유사시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구비토록 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전원을 「교도대」에 편입시켜 교내군사훈련(연간 240시간)과 함께 년 1회 2개월씩 4년간 1,780시간을 현역 군관지도하에 입영집체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입영훈련시의 내용은 김일성사상과 공산주의에 관한 정치학습, 공격, 방어, 유격 등 전술훈련, AK소총, 기관총, 박격포, 고사포 등 화기학이론과 사격훈련, 화생방, 독도법 등 실전과 흡사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학생 교도대는 준(準)군사부대로 조직되어 전쟁지도와 군사문제의 최고 집행기구인 노동당 군사부의 직접 지휘·통제하에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지휘 및 교육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동원을 기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교육에 관해서 83. 7.10일자 뉴욕 타임즈지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봄부터 10대 청소년 수만명이 매주 평일에 새벽 3시경부터 동이 틀 때까지 평양시를 가로 지르고 넓은 광장에서 제식훈련을 하고 있다.

주말이면 이 훈련연습이 거의 저녁 때까지 연장된다.

일부는 군복 같은 제복을 입고 목총을 들고 있다.

북한 관리들은 김일성 수령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 총연습을 하는 것이지 결코 강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교육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분야가 학생들에 대한 의무 노동제의 적용이다.

북한 학생들에 대한 의무노동제는 1959년 3월2일에 공포한 「내각결정 18호」에 의해 법제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각급 학교에 대한 노동량은 인민학교 연간 2~4주, 고등중학교 6주~8주, 고등전문학교 12주, 대학교 12주~14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노동기간에는 수업을 전폐하고 노동에만 종사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방과후 수시로 4~5시간씩 의무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북한에서의 학생노동은 학생들이 공장이나 농장에 나가 단순한 작업과정을 통해 배우는 「실습교육」이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 과제 해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원리와 교육지침 등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현의 형태들은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은 교육내용을 알아보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초·중·고등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 16권을 분석한 결과 (1)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고, (2) 반미 감정의 양양과 반미 투쟁의식 고취를 위한 내용, (3) 당과 전체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전체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강요하는 내용, (4) 북한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조국건설’의 보람과 긍지를 강조하는 내용, (5) 혁명전통과 혁명정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수학 교과서에서 추출된 정치사상적 특징으로서는 (1) 북한의 업적 찬양을 통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2) 한국에 대한 비난을 통하여 반한(反韓) 의식고취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리·화학·생물·지리·음악·미술·공산주의 도덕·김일성 혁명활동 등 각급 학교의 교과서 내용도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같은 내용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음은 다음의 자료들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가장 기쁜 날은 몇월 몇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달력에서 찾아 보시오”(인민학교 4학년 수학)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한 전투에서 승냥이 미국놈을 265명 죽이고 나머지 157놈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 승냥이 미국놈이 몇 놈 있었습니까?”(인민학교 2학년 수학)

“「미국놈은 우리의 원수」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불벼락 맞을 원수놈들」 「지주놈」 「자본가놈」 「싸우는 아저씨들」”(인민학교 1학년 사회 목차)

“남조선의 한 농민이 당장 굶고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리대금업자한테서 3만원을 빌렸다. 이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는 4년 후에 년리 10할로 받아 내려고 날뵈다. 가난한 이 농민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가?”(고등중학교 3학년 대수)

“「김일성 장군의 노래」 「원수님께 인사드려요」 「미제놈을 죽이자」 「꼬마 탱크 나간다」 「땀고 미운 지주놈」”(인민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곡명)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공업화 농업이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남조선에서는 경제가 전례없이 몰락하고 쇠퇴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경제가 이같이 락후한 원인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고등중학교 3학년 지리)

북한의 교육행정은 재량권과 자율성이 일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오직 당에 의한 통제와 간섭만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또한 탁아소, 유치원 시절부터 개인적 사고와 활동이 억제된 가운데 김일성 우상화교육 및 적에 대한 중요심을 고취시키는 등의 조기집단교육의 실시도 자아의식과 창의력이 상실된 가운데 호전적 공격형의 성격구조를 형성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우기 각종 노력동원과 군사훈련으로 학습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함은 물론, 교과목 구성에 있어서도 학문과 무관한 정치사상과목의 비중이 높아 감에 따라 기초 과학지식 결여, 과학기술 습득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구조(입학·취업시 능력 보다는 당성, 사상성 우선)가 심화됨에 따라 자포자기의 사고 속에서 불평 불만의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시설과 기자재 등의 태부족 현상과 질적으로 저수준급에 머물고 있는 교사들의 자질 문제에서도 오늘의 북한 교육이 안고 있는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6. 민족사 해석문제

공산주의 역사관

역사 서술상의 특징

민족사 날조 사례

6. 민족사 해석문제

공산주의 역사관

공산주의 기본교리인 유물사관의 역사적 관점은 (1) 경제위주의 역사관, (2) 계급투쟁의 역사관, (3) 폭력혁명의 역사관, (4) 직업적 혁명가 관점의 역사관으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위주의 역사관이란 마르크스가 “인간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경제”라 부르고 “이 경제는 법률·정치·종교·예술등 모든 인간의 정신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소”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유물사관은 경제라는 입장에서 인간의 역사를 인식하고 해석한다.

또한 경제구조를 토대로 사회구조를 파악하며 경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인간 역사를 분석하게 되는 것이 유물사관의 입장이다.

따라서 유물역사관은 역사를 통하여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양식이 인간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발달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역사적인 분석과 해석은 종국적으로 공산주의를 합리화하고 필연화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둘째, 계급투쟁의 역사관으로서,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 단계에 따라 인류 역사를 몇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투쟁과정을 역사의 전부로 보았다.

따라서 계급간의 협조나 단합을 통한 역사는 원칙적으로 유물사관에 의하여 배격되며 노예와 노예소유자 계급간, 농노와 봉건 영주간,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간의 계급투쟁은 곧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기인되고 경제적 이해관

계가 상반되므로 대립투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유물사관은 역사를 투쟁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유물사관은 인류 역사를 불가피한 계급투쟁의 기록으로 볼 뿐만 아니라 생산관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인간의 투쟁을 종식시키는 길은 오직 공산주의가 승리해야 된다는 필연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인식하려고 한다.

세째, 폭력혁명의 역사관이란 마르크스에 의하면 “혁명은 계급투쟁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혁명없이 근본적인 사회변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폭력에 의한 혁명은 대다수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또는 피억압자, 피지배자 계급이 자본가, 지배자, 억압자 계급을 타파시키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물사관은 이러한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피지배자 계급인 노동자, 농민, 노예의 입장에서만 역사를 보려고 한다.

따라서 역사는 이들 피지배 계급으로서 노동자, 농민이 그들의 지배계급에 대하여 어떻게 투쟁하여 왔는가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기록은 폭력혁명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고 평가되는 것이다.

네째, 직업적 혁명가 관점의 역사관이란 레닌이 주장한 것으로써 “공산혁명이 성공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훈련을 받고 그것에만 종사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지도를 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계급의식이 미약한 근로대중은 소수의 정예 직업혁명가에 의하여 지도되고 선도되어야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공산당 조직의 견고함과 행동강령, 지도성에 대하여 논급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전위당론적 레닌의 주장은 유물사관에도 반영되어 있고 이것이 또한 공산주의의 중요한 원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노동자, 농민의 투쟁과 혁명이 실패한 원인을 직업적 혁명가나 투철한 공산주의자의 지도가 없었다거나 노동자, 농민의 계급의식

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역사 해석상의 합리화는 레닌의 전위당론적, 직업적 혁명가 관점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유물사관의 역사적 기본관점과 특징을 살펴 보았다. 요컨대 유물사관은 공산정치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합리화 하기 위해 합목적적으로 창출해낸 교리적 성격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현재 공산정치에 대한 역사적 필연성과 합리성,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다시 말해 현재의 공산통치에 대한 명분과 정치적 정당성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유물사관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 또는 날조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교리적이고 절대적이며 폐쇄적이고 정치적인 역사 해석의 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가 정치적이며 파당적이고 폐쇄적이며 필연론적인 유물사관을 역사관으로서 택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자체의 폐쇄성, 필연성, 절대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역사 서술상의 특징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역사학이 정치목적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된다. 이는 일반적인 사실이며, 북한 역시 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어느 공산독재국가보다도 철저하게 정치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 현실이다.

즉 우리의 국사관은 홍익인간적 인문주의,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적 개인존중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민족주체성에 입각하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성장 발달을 중심으로 각 시대에 있어서의 민중의 활동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민족의 내재적 발전방향을 인식케 하는 한국사의 편찬”을 기도하고 있다. (한국사 편찬 요강)

그러나 북한은 엉뚱하게도 역사에 대해서 “김일성 동지와 우리 당 중앙위원회 사상으로 자체를 더욱 튼튼히 무장하도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조선역사, 1963. 학우서방 간행 p. 3)

“김일성이 우리나라 역사를 체계화하는 데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과학이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어 우리 역사의 앞길을 밝히었다”(조선전사, 서문)고 강조함으로써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역사관은 유물론과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계급투쟁의 실천적 의의를 인식케 하고 김일성 교시의 체득을 강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김일성 자의대로 우리의 민족사를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우리 국사에 대한 몇가지의 기본입장과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우리 역사의 시대구분을 도식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물사관에 의하면 “인류역사의 발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해 몇 단계로 구분하고,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객관적 물질적 조건으로 인하여 인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류역사도 이러한 경제관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제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자본주의사회를 거쳐 공산사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북한은 이 같은 마르크스의 「5단계 사회발전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1) 원시사(원시공동사회) : 사전사(史前史)~기원전 5세기
- (2) 고대사(고대노예제사회) : 기원전 5세기~기원전후 고조선·부여·진국시대
- (3) 중세사(중세봉건사회) : 기원전후 3국의 성립시기~19세기 전기 조선왕조 말기의 개항전
- (4) 근세사(근대자본주의사회) : 19세기 후기 개항 이후~해방전
- (5) 현대사(사회주의사회) : 해방 이후~

특히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또는 한반도의 역사정통성)를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조선→현 북조선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서술하고, 고조선→3국시대→통일신라(발해)→고려→조선→대한민국으로 보는 우리의 역사체계에 대해 극히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대구분과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발전 도식은 공산주의를 역사적으로 필연화하고 합리화 시키려는 데 그 의도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하겠다.

둘째, 북한은 우리의 민족사를 투쟁과 폭동·전쟁 중심의 역사로 왜곡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역사>(평양, 동평양 인쇄공장, 1962년)에서는 「9세기 신라에서의 농민폭동」(제4장 제3절), 「평안도 농민전쟁」(제16장 제2절), 「농민폭동의 전국적 양양」(제6장 제2절), 「계급적 모순의 격화와 인민들의 투쟁」(제15장 제2절), 「임오 군인폭동」(제18장 제3절)등 폭동·투쟁의 용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설정한 내용만도 총 64개의 절(節)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2개 절에 이르고 있다.

또한 <조선전사> 서문에서는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여 “인류역사는 아직 어떤 통치계급이라도 반혁명적 폭력을 쓰지 않고 공손히 정권에서 물러선 실례를 알지 못한다. 김일성 수령이 정식화한 이 고전적 명제는 혁명투쟁에서 폭력 사용의 불가피성의 보편적 진리를 밝혀 주었다”(김일성 저작전집 5권)고 밝힌 바와 같이 폭력투쟁 중심의 역사서술에 대한 그들의 기본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조선역사>에서는 「홍경래 난」을 「평안도 농민전쟁」(pp. 119~126)으로 이름을 붙여 “통치배의 부패와 무능을 폭로시키고 심각한 타격을 주어 붕괴를 촉진하였다” 하고, “농민들과 함께 상인, 광부까지도 다수 참가, 관청 관료·지주를 처단, 봉건적 신분제도, 지방차별을 반대하고 일시 지방행정도 장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묘청의 난」, 「정지상의 난」, 「만적의 난」을 미

화, 찬양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고, 조선시대에 발생한 「이시애의 난」을 「함경도 농민전쟁」으로 표현하여 “목전의 착취자인 봉건정부와 남도 출신 양반들의 가혹한 억압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운운 하고 있다.

더우기 조선조 중기인 15세기와 16세기에 ‘유민 무장단’들의 투쟁이 광범위하게 일어 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홍길동의 투쟁」(1498년) 「임거정(林巨正)의 투쟁」(1559년)등을 꼽고 있다. (조선역사(상) 1972. p. 38)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의 역사가 폭력, 폭동, 전쟁 등의 무력적 투쟁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인류역사를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입증시킴으로써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계급투쟁을 합리화해 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 북한은 농민·노동자를 역사발전의 주체로 내세우고 귀족층의 업적을 배격하는 동시에, 계급간의 투쟁과 갈등을 중심으로 민족사를 서술하고 있다.

즉 북한은 “계급투쟁은 노예사회에서는 노예주를 반대하는 노예들의 투쟁으로, 봉건사회에서는 지주를 반대하는 농노와 농민들의 투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을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으로 나타났다”(정치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79)는 계급투쟁사관의 역사해석 체계에 의해 민족사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지배층 중심의 왕조사를 전적으로 배격하는 입장에서 지배계급인 왕과 왕족, 상류지배층과 양반계급 모두를 착취계급으로 낙인을 찍고 그들의 활동과 업적은 역사기술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역사서술에 대한 입장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이원적 역사요소를 무시하고 피지배층의 민중위주의 역사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불확실한 투쟁사실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왜곡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예컨대 고려시대 금속화폐의 사용은 “농민들에게 이롭지 못했고”(조선역사, p. 167) “봉건·착취계급들은 금속화폐를 강제로 쓰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생산

한 물건을 헐값으로 빼앗았다”(위의 책, p 167)라고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도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조선전사 11권, 평양, 사회과학원연구소, 1980. pp. 311~312)고 해석하는 등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특히 문학과 그 작품의 소개에 있어서도 편파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

• 이규보(李奎報) :

“농민들의 고통에 무한한 동정을 기울이고 착취자들에게 증오의 불길을 퍼붓음”
(농부를 대신하여 읊음)

“고랑에 엎드려 비 맞으며 김매니 거칠고 검은 얼굴 어찌 사람이라 왕손, 공자들이
아 업수이 여기지 말라 부귀 호사가 우리 손에 매였나니 햇곡식 푸르러 채 익기전에
관리며 서리들 조세를 매기도다 애써 가슴땀은 나라 위함이어늘 어찌타 우리
네를 살까지 벗기려노” (조선역사, p. 226)

• 이각(李穀)의 요가(要歌) :

“요즈음 권세를 가진 자 백성의 눈발 빼앗아 산과 내를 경계로 논귀 밭귀를 만드
나니...

장정들은 몇천이나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흩어지고 힘 못쓰는 늙은 놈이...

빈방만 홀로 지키니 차마 구렁에 굴러 숨겨두기 기막혀 호젓한 산등성이에 올라
도토리를 줍나이다.

누가 모르랴 저 아름다운 조반위의 기름과 음식이 모두 다 이 촌 늙은이의 피 눈
물이란 것을”

<가장 탁월한 작품(作風)의 하나임>(p. 227)

이와 같이 피지배계급의 지배계급에 대한 원망, 증오를 나타낸 작품을 “가

장 탁월한 작품”으로 추켜 세움으로써 「계급투쟁성」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문학의 발전」(조선역사, pp.151~162)에서는 “사회 모순의 첨예화와 인민들의 투쟁이 점차 장성함에 따라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서민문학이 창작 보급되었다”(p. 151)고 전제하고, 이 시기의 소설 창작성에 나타난 특징으로 “주제와 내용에서 대외·대내의 슬기로운 인민투쟁, 봉건윤리배격과 개성의 해방, 지배층에 대한 냉혹한 비판·조소 등 인민들의 생활·염원·지향들이 반영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해석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박씨 부인전> : 이것은 너자를 멸시하여 한평생 규방에서 살게 하던 봉건적 폐습을 반대하는 진보적 입장을 반영함. (p. 153)
- <홍길동전> : 봉건적 신분제도를 반대하고 봉건적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일어난 농민 봉기를 반영한 작품임.
그러나 역사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그것은 다만 이상적인 봉건왕국을 넘원하는 데 머물고 말았음. (p.153)
- <구운몽> : 봉건적 이데올로기의 구속과 적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의 자유를 지향한 작품임. (p.154)
- <장화홍련전> : 환상적인 수법에 의하여 원한을 푸는...
비현실적인 것이기는 하나 봉건적 양반 가족제도와 그 당해 사회가 빚어 낸 사회적 악행에 대한 인민들의 복수와 증오의 기분이 반영됨. (p.154)
- <콩쥐 팥쥐> : 슬기롭고 근면한 여성상을 그렸고... 노동의 기쁨을... 천대와 착취를 받아 오며 등골이 휘도록 일해 오던 인민의 원망을 반영한 것으로 소설의 마지막에 와서 계모와 팥쥐가 엄벌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인민들의 심판임. (p154)
- <토끼전> : 토끼는 근면하고 지혜있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사는 인민들, 자라와 용왕은 탐욕적인 양반 통치계급으로 묘사한 작품임. (p.155)

- <홍부전> : 작가는 상품화폐 관계가 장성함에 따라 벌어지는 착취계급(농부형상)과 인민(홍부형상)간의 대립투쟁을 반영함. (p.155)
- <심청전> : 심청의 파란 많은 생애를 통해서 가난하고 완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오고야말 광명의 세계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보여줌. (p.155)
또한, -심청은 인민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조선의 딸
-불교의 위선성, 반인민성 폭로(눈을 뜬 것은 부처의 힘이 아님)
-가난한 사람은 귀중한 생명도 보존치 못하는 사회의 불합리성 규탄
- <춘향전> : 봉건 신분제도를 초월한 남녀의 사랑과 양반 관료배들의 포악성, 반 인민성을 폭로한 작품임. (p.156)
- <양반전> : 양반의 허위 허식, 공명심과 출세주의, 그들의 기생충적 생활을 폭로함. (p.157)
- <허생전> : 농민이 빈곤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은 봉건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농민 해방의 사상을 주장함. (p.158)
- <허균> : 양반 서자 출신으로서 봉건제도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반대파 관리들을 규합하여 리조 왕조 전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 당시 선진적인 사상가이며 작가이며 시인임. (p.153)
- <김천택> : 양반 통치자들의 부패성과 그들의 부귀영화만을 탐내고 있던 생활을 비판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근면성, 소박성을 찬미함. (p.159)
- <정약용>의 시는 봉건통치자들의 부패와 약탈 행위를 폭로한 것이 많음.
<굶주린 인민>에서
 풀인양 나무인양 우리 인생이
 물과 흙으로만 살아 간다네
 쌀이여 구슬보다 귀하다거니
 너 어찌 배부르게 먹었을소냐...
<고양이의 론고장>(p.161)

지방관리들을 쥐로 묘사했고
암행어사를 고양이로 묘사하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쥐와 결탁하여 인민들의 재물을 훔쳐 먹는다고 논고함. (p. 161)

• 〈김삿갓의 -가난한 집-〉(p. 162)

상 우에는 고기 한 점 없어
채소만이 권세를 부리고 있네
부엌에는 나무 한 가지 없어
울타리만 화를 입도다
부자간 문을 나설 때면
한 벌 옷을 서로 갈아 입고
시어머니 머느리는
하나밖에 없는 그릇으로
밥을 먹도다

• 〈김홍도의 그림 -지주와 타작하는 사람-〉

거만하고 무례한 지주들과 착취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생활상을 묘사(p. 164)

이와 같이 북한은 문학예술에 나타난 작품의 성격에서조차 피지배계급의 지배계급에 대한 갈등과 투쟁의 과정으로 해석함에 따라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역사기술의 입장은 그들의 폭력혁명론을 합리화 시키고 프롤레타리아의 혁명투쟁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데 귀일하고 있다.

네제, 북한은 유·불·선(儒·佛·仙)등 종교 및 종교계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영향을 관념론으로 일축하는 반면, 실학자 등을 유물론자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예로서 그들은 〈성호사설〉星湖僊說의 저자 이익(李翼)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익은 유물론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일

체 허황한 종교적 교리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며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역사, p.136)

또한 <홍대용의 사상>에 대하여서는 “무신론적 입장에 서서 오행설·도참설·풍수설 등을 비판하고 사대주의 사상을 배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pp. 137~138)

그러나 “이익의 사상이 오늘날 역사에서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유물론자로서 선진사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학계의 풍조였던 주자학의 공론을 배격하고 민중의 실생활과 관련시켜 실학 탐구의 체계를 세웠다는 관점 때문이다.”(북한의 사관 비판 연구, 국토통일원, 1984. p. 337) 그리고 그가 종교에 대하여 비판하였던 것은 종교를 배격하는 유물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체의 공론을 배격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이 관념론적 입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유물사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과 이를 고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함은 물론,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는 그들 체제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키 위한 의도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해준 자료로서는 「실학사상의 특성」으로 “인민대중의 이해관계와 지향을 반영, 인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투쟁, 사대주의 교조주의적인 학풍을 반대, 농민들이 반드시 토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고수, 신분 철폐, 만민평등 등 인간의 개성을 해방시키려는 진보적 사상”(조선역사, p.145)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실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반봉건적 세력의 희망을 대변하고 그들의 연구성과가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킨 점, 각종 종교 비판과 유물론적 사고의 전개 등”(p.146)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실학을 구체적으로 상론하고 있는 가운데 유물론과 관련시켜 등장시킨 인물은 이수광, 유형원, 이익,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등이다.

결국 북한은 우리의 역사를 관념론에 대한 유물론의 투쟁과정으로 서술함

으로써 유물론에 대한 오늘날의 공산주의를 역사적으로 필연화, 합리화, 타당화 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근대사에 비중을 두되 김일성과 공산당의 활동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979년부터 1982년에 걸쳐 이른바 “김일성 70돛의 생일행사에 맞추어 당중앙의 영도 밑에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편찬·출판” 했다고 하는 전 33권의 <조선전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조선전사> 33권의 구성체계를 보면, 원시편을 제1권으로 하여 50만년 전부터 BC 10세기까지 이른바 「원시공동체사회」를 서술하고 있고, 제2권은 고대편으로서 고조선, 부여, 진국 등 「고대노예제사회」를 서술하고 있다.

중세편은 3권에서 12권까지(10권) 3국시대부터 이조말까지의 소위 「중세봉건사회」를 서술하고 있다.

1860년대 초기(개항후)를 근대의 기점으로 잡은 근대편(13권~15권)에서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부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제16권부터 33권까지의 18권에 달한 방대한 양의 현대편은 1925년을 현대의 기점으로 하여 김일성의 사적 날조와 우상화 등 현대사를 송두리채 김일성 왕조사로 날조해 버렸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전사>의 서문에도 밝힌 바와 같이 “김일성 수령의 혁명활동의 개시로부터 영광찬란한 길을 걸어 온 현시대, 주체시대의 역사를 체계화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김일성 개인중심으로 최근 역사를 기술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또한 동책자의 서문에는 “아버이 수령님의 육친적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학계의 힘을 모아 조선전사를 편찬 하였다”느니, 또한 김일성은 “역사과학의 방법적 지침을 마련하여 주었음 뿐 아니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선 역사를 새롭게 체계화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학자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었고 과학이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몸소 풀어 주시었다”고 지적, 그들 역사서술 방향이 얼마나 정치적이며 반민족적 작태인가를 스스로

노정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유물사관의 제반 교리와 가설들을 직접적으로 도입하여 우리의 역사를 교조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은 물론, 유물사관을 교조적으로 원용한 결과 우리 민족사를 공산주의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즉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한 맥락”으로 전락시킨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다.

특히 북한은 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의 투쟁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의 투쟁으로 도색하여 기술함으로써 전민족적이기 보다는 파당적, 개인적 역사로 우리의 근대사를 날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전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총33권중 18권을 김일성 시대 역사로 편찬, 역사서술의 분량면에서도 전 내용의 50%이상을 김일성 우상화에 편중시키는 등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민족사 날조 사례

이상과 같은 역사관의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이 우리의 역사를 날조, 왜곡한 몇가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민족기원(起源)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족은 평양지역에서 발생, 진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전사 1권, p.21)

그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타당성과 그 근거의 자료로서 1966년에 발굴된 평양시 「상원 검은 모루」(흑우리) 동굴유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동굴유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40~60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유적의 하나”라고 주장(조선통사 1권, p.3)해오다가 1979년부터는 “사람이 동물계로부터 갓 벗어난 인류진화의 첫 단계 자리”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족발생지로 확정시켜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이 북한이 평양을 민족발생의 기원지로 주장하게 된 것은 말할 나위없

이 민족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신라를 후기신라로 호칭하고 “신라 통치배들의 사대주의정책의 후과 때문에 나라가 통일되지 못하고 발해와 신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최초 통일국가는 신라가 아니라 고려”라고 단정지어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고려의 통일론은 김정일이 지침을 제시하였다”고 주장(역사과학, 81년판 1권 p.21), 그의 우상화에 이용하고자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통사> (77년판, p. 151)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신라의 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하여 외적을 끌어 들이고 그들과 힘을 합쳐서 국내전쟁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나라는 막대한 전쟁피해를 입게 되고 국토의 적지 않은 부분을 침략자들에게 빼앗김으로써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엄중한 죄과를 저질렀다”고 하는 등으로 고구려의 정통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신라의 삼국통일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삼국유민의 협력, 신라문화의 내재적 역량 등을 송두리채 말살시키는 과오를 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역사상에 있어서의 종교가 “봉건통치배들이 인민을 우민화시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파시켰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민속 신앙은 “지배자들이 국가사회체제를 신성화하기 위하여 날조한 잡다한 귀신”이라고 까지 비난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종교적 활동이 “국가사회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근원에서 나온 예술이 민족고유예술의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3·1운동을 대략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날조하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의 역사날조, 자유평론사, 1977, pp.49~50)

첫째, “세계의 모든 피압박민족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족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 의하여 각성되었고, 그 각성으로 인하여 자기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투쟁에 나서게 되었다”고 주장, 3·1운동의 배경과 동기를 왜곡, 날조하고

있다.

둘째, “3·1운동은 부르쵸아지, 지주제 종파의 승려대표자를 지도부로 하고 평화적, 탄원적 성격으로 시발하려 했지만, 마침내 혁명적 민중봉기로 발전하여 항일투쟁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일어났고 농촌에서는 지주 습격, 예속적 차지계약과 채무증서의 투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등으로 3·1운동의 성격과 양상을 왜곡하고 있다.

세째, “3·1운동이 민족적, 사회적 해방투쟁으로 확대되자 부르쵸아지 그룹의 지도부는 겁을 집어 먹고 일제를 향하여 오히려 구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민족대표들을 모략 중상하였다.

네째, “3·1운동은 항일의 위대한 투쟁이었으나 실패했다. 그 원인은 지도부가 혁명세력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제와 결탁한 부르쵸아지 분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왜곡하였다.

다섯째, “3·1운동의 경험과 교훈은 혁명적 지도부로서의 공산당 없이는 민족적, 사회적 해방투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중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여 민족의식을 공산주의의식으로 바꿔 놓으려고 하였다.

여섯째, “3·1운동 이후의 조선민족운동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되었고 지도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은 역사적으로 그의 중심인물이다”라고 주장, 김일성 우상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3·1운동을 러시아의 10월혁명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성격을 「인민봉기」로 규정하고 3·1운동의 주체를 노동자·농민집단만으로 한정시키는 한편, 민족대표를 모략 중상하고 실패원인에 대하여 “탁월한 수령의 영도와 당의 지도 및 전위대의 부재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다”는 등으로 3·1운동사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왜곡, 날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적 역사관, 북한의 역사관점, 서술내용상의 특징을 개관해 보았거니와, 결론적으로 북한의 역사편찬은 한민족에 대한 역사연구와 서술방법을 사실(史實) 전반에 관한 실증적이고도 과학적인 연구분석과 종합적인 해석을 토대로 하여 체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하

민족사 해석문제

나의 정치도구나 수단으로 삼아 당성·계급성원칙에 입각한 「계급투쟁사관」으로 도식화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의 의도, 정치현실 및 제반 정책방향과 상치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왜곡, 날조와 근시적, 편향적 인식을 강요함으로써 한민족사 전반을 투쟁 및 혁명에 의한 노동자·농민의 항쟁사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혁명투쟁사로 변조시켜 왔다.

더우기 순수한 역사연구에서의 이탈은 물론, 합리성, 과학성을 결여하여 민족문화의 정통성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의도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역이 위치적으로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김일성체제의 역사적 필연성과 정권적 정통성을 합리화하려는 데 있으며, 특히 김일성 영도의 이른바 위대성과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자 하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전사> 편찬을 김정일의 공로로 대내외에 선전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치목적을 「민족사적 요구」로 인식케 하려는데 그 의도를 두고 있다 하겠다.

더우기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는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에 대한 평가를 과학적인 근거나 뚜렷한 사료(史料)의 뒷받침 없이 임의로 단정하는 등의 학문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료들은 그들 체제에 부합되도록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날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서 한반도의 정사(正史)로 오관하여 인용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이거니와 민족사의 이질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다.

7. 문학과 예술

공산주의 문학·예술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중자론’과 ‘속도전’

통제 실태

창작성향과 작품내용

7. 문학과 예술

공산주의 문학·예술관

예술이란 “특종의 재료, 기교, 양식 등에 의한 자연이나 인생의 아름다움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문학 예술활동은 “자유롭고도 순수한 내심의 욕구에 의하여 미를 창조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문학 예술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가?

레닌은 1905년 「당조직과 당문학」이라는 논문에서, “당 문학의 원칙은 문학이 개인이나 그들의 이익수단이어서는 안되며 개인적인 것이어서도 안된다. 문학은 노동자계급 일반의 행동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비당성 작가를 타도하자. 문학은 프롤레타리아트 행동 일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문학은 조직되고 계획되고 통일된 사회민주주의적 당 활동의 한 성분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문학 예술에서의 계급적 성격과 문학 예술을 계급투쟁의 한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후르시초프 역시 「문학예술의 로선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당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활동의 수많은 수단 가운데 사람들의 감정과 의식에 호소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을 갖는 문학과 예술의 의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술창작에 있어 당파성이라는 것은 곧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 공산당의 정책실현을 위한 위대한 인민의 사업에 자기의 역량과 능력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고 역설함으로써 문학 예술 본질에서의 정치사상성 내지는 당파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전서 중권,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pp. 240—248)

더우기 모택동은 문학 예술에 대하여 “문학 예술은 정치에 귀속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혁명적인 문예는 전체혁명사업의 일부이며 기계 전체에 있어서는 불가결의 톱니바퀴이며 나사못이고 전체의 혁명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1960년 11월 27일 「작가, 작곡가, 영화부문 일꾼들과의 담화」에서 “우리 당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이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부르주아지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들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두철미하게 의거하는 혁명적 문학 예술만이 진정으로 근로대중을 공산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강력한 무기로 될 수 있다”고 피력, 문학 예술이 당에 철저히 예속되어 당노선과 정책에 무조건 복종할 때 비로소 존재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천리마 시대에 맞는 혁명적 문학 예술을 창조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작가들 앞에서 행한 담화에서는 “군중을 교양, 개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선전 선동만으로도 안된다.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인 소설, 시,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무용 등 여러 형태의 문학 예술이 담당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연합조직을 만들고 당에서 이를 직접 지도,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문학 예술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기능의 강화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그는 1966년 10월 16일 제9차 미술전람회를 보고 「미술가들과의 한담화」에서 “우리 화가들은 당연히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하여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생활을 힘있게 불려 일으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고무, 충동하기 위해 나의 과거 내력을 미화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모든 작품창작에서 김일성의 근거없는 「항일무장투쟁」의 날조와 「혁명전통」 조작을 위한 김일성 개인 이상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는 “문학 예술부문에 제기된 중요한 과제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 일이다. 우리는 문예활동에서 전문가 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수고 문학 예술을 균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로부터 북한의 문예물에는 무조건 ‘혁명’이라는 어휘를 붙여 「혁명소설」 「혁명가극」 「혁명대작(大作)」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북한 「헌법」 제45조에는 “국가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 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문학 예술에서의 대중화와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문학 예술은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또는 가장 위력한 정치교양활동의 한 수단으로 규정되고, 모든 문예활동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혁명의 불가피성과 앞으로 공산사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 전망, 노동계급의 찬양, 물질적 요새를 구축하기 위한 노동의욕의 고무 충동, 소위 ‘혁명적 인간’의 영웅화를 형상적으로 묘사하도록 하려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혁명적 무기’로 규정된 북한에서의 문학 예술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근본적 개성을 부정한 토대 위에서 창조자로서의 금지와 전문가로서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포기할 때에만 비로소 그 존재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이와 같이 북한의 문학 예술은 개인의 인격과 개성의 말살을 통해 정착된 ‘집단주의 미학’의 근본원리 위에서 출발하며 개개인의 재능과 노력을 국가적 목표로 단일화시키고 그것을 다시 체계적으로 흡수하여 선전 선동 및 사상교양과 혁명화의 무기로 재투입시키는 데 전적으로 이용할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북한 문예이론의 결정적 특징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토대로 한 김일성의

「교시」로 부터 출발하고 또 그것에로의 귀착을 강요한다는 데 있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기본원리로 채택함과 동시에 그들이 채택한 주요 정책중의 하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다.

1932년 10월 26일 고리키의 집에서 이바노프 등 45명의 문인이 참석하여 「작가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스탈린이 행한 연설중에 최초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사용됨으로써 이 말이 공식화되기 시작 하였고, 모든 공산 국가의 문예창작이론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이러한 스탈린의 이론은 “내용은 무산계급적인 것이고 형식은 민족적인 것이다. 무산계급 문화는 결코 민족문화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용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민족문화는 무산계급문화를 폐기하지 않고 형식을 부여해 준다” (스탈린이 1952. 5. 18 동방노동자 공산주의대학의 학생대회에서 “동방민족대학의 정치임무”라는 제목으로 행한 연설문)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예술은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을 가진 예술”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미학원리, 소련 국가정치서적출판사, 196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한 개념규정을 최초로 내렸고, 김일성의 「독창적 이론」(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10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이라고 북한의 문예이론서들은 선전하고 있다.

여하튼 북한문예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으로 구성되며, 그것의 3요소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으로 일반화되고 있으며 (진계법(陳繼法), “사회주의 예술론” p.93) 여기에 “비타협성”의 요소를 추가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은 ‘민족적 형식’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다만 이의 중요성과 필연성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합목적적인 통합론만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형식을 결국 주체사상으로 귀결시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내용은 “혁명적이고 계급적이며,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

을 창조하는 것과, 근로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내용이며, 반제투쟁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111)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위와 같은 “사회주의 내용에다 김일성주의를 접합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당성」이라 함은 당적 사상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에 대한 충성심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김일성은 “당성이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각성이며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김일성 저작선집 3권, p.159)이라고 말한다.

또한 <문예사전> (p.197)에서도 당성에 대해 “온갖 반당적 및 반동적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공산주의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계급성’(노동계급성)에 대한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문학예술은 반드시 어떠한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며,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는 계급적 성격을 띠고, 이 계급성은 계급투쟁의 무기임과 동시에 노동계급에 대한 교양수단이 된다”(문학예술사전, p.144)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혁명적 문학이 계급교양에 힘있게 이바지 하기 위하여서는 지주, 자본가들에게 대한 계급적 증오심을 키워주는 작품을 창작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반동적 본질과 부패상, 착취계급의 약탈적 본성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문학의 중요기능 중의 하나가 끝없이 적대감정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할 것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p.78~87)

북한의 문학 예술에 있어서의 「인민성의 세가지 표준」은 “인민대중의 이해관계가 있고 흥미있는 생활현실을 취할 것과, 그 시대에 대한 작가들의 선진적 이상이 구현된 것, 인민들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묘사의 생동성과 진실성을 가질 것”등이다. (문학개론, 평양교육도서출판사, 1961, pp.65~69)

또한 김일성은 그의 저작선집(4권 p.165)에서 “부르쥬아 문학 예술이 씌어

빠진 생활감정을 표현하고 놈들의 반동적, 반인민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복무한다면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인민성의 구현에 수반하는 창작성의 「디렘머와 부작용」, 즉—문예수준의 전반적인 저질화라던가 높은 수준의 예술에 대한 창조적 좌절에서 오는 갈등—등을 「인민성」의 이름하에 억압하고 회피하기 위한 논리적 기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타협성」원칙은 “온갖 반동적 문예조류 및 반 혁명적 문예사상과는 비타협성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김일성 저작선집 1권, p. 380)

즉 그들은 “넓은 사상과 문학 예술이 생성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은 없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 97)고 단정하면서도 그들의 「문예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협은 “외부로 부터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투”라고 경계하고 “초당성, 무계급성, 허무주의, 복고주의 등 부르조아 사상독소로 오염시키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 침투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책, p. 98)

이와 같이 북한의 ‘비타협성 적대주의’는 유물론적 역사법칙의 하나로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즉 김일성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이론으로 까지 확대, 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종자론’과 ‘속도전’

북한은 1975년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이라는 당 지침서를 발표한 이후, 사실상 북한의 문학 예술작품 창작과 이론면의 준거로 삼아 왔다.

이 같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당 지침서가 김정일에 의해서 저술된 것으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지침서의 이론가운데는 이른바 ‘종자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김일성의 「창안」이라고도 하고, 김정일의 「독창적 대발견」이라고도 한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 (pp. 769~771) 에 의하면 “종자란 작품의 기본핵이며,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문제이므로 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또한 동 사전은 “종자의 본성은 작품의 사상예술적 핵으로 된다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실로 종자에 관한 사상은 주제, 사상, 소재 등과 같이 문학창작의 어느 한 개별적인 범주에 대한 사상이 아니라 소재의 선택과 구상으로부터 작품의 얽음새와 구성, 성격창조와 양상 등 창작의 전 과정에 전일적으로 작용하는 기본고리에 대한 사상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을 밝혀주는 기초에 관한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자론’을 요약하면, 종자란 사상적 알맹이이며, 작품의 소재, 주제, 사상들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문예학의 최초개념이고, 이러한 통일성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뜻한다. 그리고 종자는 ‘속도전’의 선결조건이자 성과를 결정짓는 것이며, 종자의 선택은 「김일성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수령」(하나)과 「대중」(전체)과의 관계에 있어 전체의 하나에 대한 복종이 「절대성·무조건성의 원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자면 좋은 종자가 있어야 하며, 그 종자에서 가치를 치고 꽃을 피워야만 주제가 선명해지고 사상성이 풍부해진다”(평양방송, 82. 5. 16)고 언급함으로써 문학 예술에서의 「종자」는 오로지 「김일성 사상」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결국 ‘종자론’은 모든 사상체계를 단일화하고 단순화시키기 위한 문예학의 한 전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종자란 ‘사상적 알맹이’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맑스·레닌」의 사상과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되었다고 하는 「김일성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장 독특한 형태의 교조적 이데올로기의 실천적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문예에 있어서의 ‘속도전 원리’는 문학 예술이 창작과정을 전투행위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사상분야에서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을 벌려 문학 예술부문 일꾼들의 사상의식을 쪼먹고 속도전을 방해하는 사상적 잡귀신들을 극복해 나감으로써만 창작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 230)

이와 같이 북한은 문학을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적 주체성에 입각한 개인의 창작행위로 보기를 거부하고 전격전 등의 속도전과 같은 전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속도전의 성과사례로는 “가극예술 발전에 혁명적 전환을 일으켰다”고 하는 「피바다」식 혁명가극을 불과 2년동안에 5편씩이나 창조해 낸 것을 비롯하여 “기념비적 대작”이라고 하는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40일간에 창작한 예를 들고 있다.

북한은 문학예술에서의 ‘영감’을 부정하는 대신, “혁명적 또는 정치적 열정”을 속도전의 속성으로 내세우는데 집착하고 있으며, 특히 작가들에게 자각과 책임감을 높여 “창작에 모든 사색과 정열, 온갖 지혜와 재능을 쏟아 붓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고도로 조직화된 정신적 착취와 압박을 공식화해주는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문예이론의 특징 중에서 ‘전형화 이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전형이론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과 「전형적 인물」의 대표적 인간형으로 「김일성·김정일」부자를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북한은 「전형창조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홍기삼,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 「북한소설의 기초적 연구」, pp. 74~75. 평민사, 1978) 즉 근면성, 자기사업에 대한 영예감, 당과 조국 앞에서의 헌신성,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강인성과 불요불굴의 영웅성, 동지에 대한 우애와 협조, 집단에 대한 충직성, 전진과

혁신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북한의 문예사전은 「전형」과 「전형적인 것」을 구분하고 전형은 인물의 성격문제에, 전형적인 것은 현상, 사건 성격 등 전반적인 문제에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전형」이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며 해당시기의 일정한 계급과 계층들의 본질적 특성을 체험한 개성적인 인간성격”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부정적 인물의 전형은 사멸하여 가는 반동계급들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함으로써 낡은 사회의 부패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보여 주는데 목적이 있다”(문학예술사전, pp. 618-619)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문예에 있어 부정적 인간형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반공산주의적 부정적 인간이 그들 사회에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부정적 문예는 부정적 요소를 다루는 그만큼 반사회적인 것으로 규탄된다. 그러나 부정적 요소를 다루어 “봉건적, 자본주의적 사상잔재와의 투쟁, 진보와 보수, 적극과 소극, 혁신과 침체, 패기와 노쇠와의 투쟁을 다룰 때 용납되며”(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 213) “공산주의적인 것의 전진을 방해하는 모든 낡은 것, 즉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사상잔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보수주의, 소극성, 신비주의, 경험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무책임성, 노쇠현상 등 온갖 뒤떨어지고 침체한 것을 반대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책, p. 214)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형화의 문제는 단순한 창작기법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문예에 대한 결정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과 그 전형의 대표적 존재가 김일성이며, 그가 제시한 역사발전이론과 사회혁신이론을 성실하게 추구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전형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통제 실태

북한 문학 예술활동에 대한 통제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과정상의 통제와

작품출판 및 공연과정상의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술인들의 창작과정상의 통제, 또는 자유보장상의 문제는 문학 예술을 총괄하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약칭 「문예총」)의 성격에서 규명되어 지고 있다.

즉 북한은 “문예총이 김일성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문학 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며 그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문학예술사전, p.698)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문예활동은 당의 선전 선동수단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총체적 임무마저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에서는 작가, 예술인이 공무원이므로 해서 창작의 방향, 창작의 분량, 공무집행(창작)의 시간등 모든 생활의 총체를 「당과 수령」의 지시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 60조는 “모든 공민이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창조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자유민주국가의 문화환경과 유사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문학예술에서의 「자유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p.41~42)

- (1) 반동적인 부르조아 작가·예술인들은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에 대한 당의 영도가 마치 문학 예술창작의 자유를 “구속”하는 듯이 악랄하게 비방 중상하고 있다.
- (2) 또한 부르조아 문예사상의 독소에 물 젖은 수정주의자들도 문학예술의 “자유화”를 떠 벌이면서 문학 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거부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 (3)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에서 볼 때 문학 예술 창작의 자유란 작가·예술인들이 사람의 자주성을 짓밟는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 수 있는 자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

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 문학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이다.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에게 허용된 자유의 범위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혁명원리에 국한되며 사회적 기능 역시 혁명화의 무기로 밖에 역할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작가동맹원들의 생활에서 통제의 정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동맹원들은 “일상적으로 소속 작가동맹의 창작실에서 근무하며, 근로 시간은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일과종료 후에는 2시간의 사상학습과 1일사업, 총화사업을 거치고 작가 개개인에게 창작 계획이 하달되고, 개인별로 년·분기·월별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소속 작가동맹에 제출, 여기서 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북한전서, 극동문제연구소, 1974. p.269)

더우기 창작이 완성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출판이 되기까지는 작품을 지부작가동맹에 제출, 지부별 합평회, 중앙작가동맹 제출, 중앙작가동맹 합평회, 정무원 출판총국 검열국의 최종 검열후 작품의 출판 및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검열에서의 착안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작가들의 성분과 사상경향성
-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 기여도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과 원칙의 적용 여부
- 군사기밀 노출 여부
-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묘사 여부
- 자본주의적 사상요소
- 공산주의 신념의 교육
- 전투성, 혁명성, 계급성 표현 여부
- 단어 및 어휘표현상의 정확도 등이다

북한의 문학 예술 창작활동은 당초부터 기본원칙이 제시된 가운데 당과 문

예단체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작가, 예술인들은 그들의 현실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상황에 쉽게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 예술인들의 인간적 갈등과 고뇌가 비롯되고 있다 하겠다.

창작성향과 작품내용

북한의 문예창작 성향은 그들의 문예이론과 정책에 전적으로 귀일하고 있다.

그러나 문예이론을 표현하는 수단(소설, 시, 음악, 미술, 영화 등 문학예술분야)에 따라 또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소 각이한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어서의 문예창작 성향은 모든 분야가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과 특징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 문학 예술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는 내용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 조작」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 문학작품은 총서 「불멸의 역사」중에서 장편소설 「혁명의 여명」 「1932년」 「배움의 철리길」 「역사의 새벽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시부문에서는 북한 「작가동맹 시(詩)분과위원회」집체작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새해의 노래」가 있다.

“아 백번을 다시 태어나도
어버이 수령님 한품에 안기고
한번을 다시 태어나도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마음...”

또한 「작가동맹 시분과위원회」의 집체작인 서사시 「인민의 위대한 태양」에
서는

“주체사상 그것은 조선의 노래
그것은 우리당의 투쟁의 기치
그것은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고 따르는
조선의 확고한 신념이여...”

라고 하여 “김일성사상(주체사상)이 겨레의 노래며 낮이며 심장일 뿐 아니라
20세기 인류의 나침반이고 햇불”이라는 것이며, 더우기 다음 노래말은 가관
이다.

“노래하라 백두산이여
너는 그 이를 너의 상상봉우에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려고
이 땅위에 거연히 솟아난 것이
아니더냐”

즉 “김일성의 위대성은 오로지 인간만이 추앙하고 찬미할 것이 아니라 백
두산 같은 자연만물과 만상 자체가 본시 김일성을 숭앙하기 위하여 조성되었
으니 함께 찬양하라는 것이다.” (국토통일원, 북한의 문화예술, 1981. p.158)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창곡 중에서도 김일성우상화와 관련된 노래가 대부분
을 이루고 있다.

그 제목을 보면,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수령님 위하여 한 목
숨바치리」, 「장군님 안겨주신 한 흙의 미시가루」, 「어버이 수령님 만풍년 주
셨네」, 「수령님 햇빛안고 싸워 갑니다」, 「청춘을 바치자」, 「수령님 위하여
당을 위하여」 등이다.

음악은 “아름답고 순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창곡 가운데는 결코 아름
답지 못한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그들의 불순한 의도는 근본적으로 음악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며, 기본적인 의미를 상실케 하고 있다.

결국, 음악의 가사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가사로 사용함으로써 음악을 그들 정치목적에 이용하자는 것이다.

미술 역시 예외는 아니다.

김일성이 화면의 주제나 내용으로 등장하는 비율은 1960년후 80% 이상을 차지하여 우상화되고 있다.

즉, 김일성의 유년시절부터의 일대기를 형상화하는 등의 소위 “혁명전통”이라는 것을 그려 한 시대의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곳곳에 세워진 「김일성 입상」과 같은 거대한 조각과 「강선제강소를 시찰하는 김일성」 「반일부대와 담판하는 김일성」 「여성 고사총수들 속에 있는 김일성」 등이 그러한 류에 속하고 있다.

특히 영화·연극분야는 김일성 우상화가 더욱 뚜렷하다.

영화는 대중침투력과 호소력이 가장 강한 매체라는 점을 감안, 이를 대중선동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불후의 명작으로 내세우는 영화로는 「내 고향」(50), 「분계선 마을에서」(61), 「정방공」(63), 「공화국 기치 만세」(64), 「유격대의 오형제」(68), 「피바다」(69), 「꽃피는 마을」(70), 「한 자위단원의 운명」(70), 「노동가정」(71), 「꽃파는 처녀」(73), 「이세상 끝까지」(77),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79), 「전사의 어머니」(79), 「성황당」(79)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은 김일성이 극본을 직접 쓴 것으로 내 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의 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 예술영화 「이세상 끝까지」의 대사와 동 영화에 대한 평론을 살펴 본다.

〈이세상 끝까지〉의 대사

어머니: 우리 장군님께서 (천천히 부드럽게 경모의 정을 담아),

땅을 주시구(감사의 정을 더욱 강조하여), 집을 주시구...(목이 메어 말을 끊어)

그래서 지금은(걱정을 높이며 그러나 음성은 낮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요 (호느끼는 목소리로,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그래 (순간적으로 감정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백성들에게(단호하게), 뭘 가져다 준게 있길래(통분함을 금치 못하며), 큰 소리요?(무게있게), 아, (자기의 감정을 증오와 격분으로 승화시키며), 그렇게도 농민들의 생활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고조되는 감정에 어울리게 높은 음성으로 대사는 빠르게), 어제 밤엔 조합돼지를 잡어서(목이 막혀서 끊었다가), 술추넘했소? (격분을 폭발시킨 최대의 높은 소리)

〈동 영화에 대한 「평론」〉

“배우는 이 대사에서 아버지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깊은 체념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대사형상으로 창조함으로써 아버지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 보위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커다란 예술적 감화력을 가지고 생동하게 보여 줄 수 있었다.”(조선예술 78년 5월호, P.27)

이상과 같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경모의 정, 감사의 정, 목이 메임, 걱정, 호느낌, 단호, 통분, 증오, 격분, 폭발 등의 감정으로 분류하여 김일성을 찬양, 숭안하고 반동을 규탄하는데 일차적이고 주관적인 감정과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평론에서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 옹호, 보위, 감화력 등의 선동적인 문귀로 찬양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김정일은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는 담화 (84.6.18)를 통해서도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해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는 문제들을 감동있게 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시기 영화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과 과업은 김일성을 영화화면에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김정일의 직접 지도하에 김일성의 소위

「항일투쟁」을 묘사한 「누리에 붙은 불」, 「첫 무장대오에서 있던 이야기」, 「백두산」 등 김일성우상화 영화의 제작에 주력해 왔다.

또한 연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의 연극은 소위 「피바다식 혁명가극」들로서 「밀림아 이야기 하라」,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와 같은 작품들이 있다.

이 중에서도 「꽃파는 처녀」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남아 있고 압박자와 착취자들이 남아 있는 한 사람들의 영원한 교과서로 될 것이며 혁명적 대작, 창작의 불멸의 본보기”(조선예술 73년 1월호, 연극평론가 장형준)라고 격찬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김일성을 우상화한 예로서 전쟁에 남편을 잃었다는 어느 여인집에 김일성이 느닷없이 방문한다. 그때 주인공인 창순은 다음과 같이 신음하듯 읊조린다.

“아버이 수령님 품에 안기여
이딸은 그 사랑에 목이 맵니다.
고마와라 은혜로운 사랑의 그 햇빛
김일성 원수님 아버지 품이여”

이 같은 작태는 김일성 우상화라기 보다는 신격화 단계에까지 와있음을 실증시켜 주고 있다.

북한 문학예술에 있어 두번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전투적 호전성」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우리 문학 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작가·예술가들과의 담화」(1951. 6. 30)에서 말하기를 “작가·예술가들은 인간정신의 기치로서 자기들의 작품이 견결한 투지와 종국적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뚜렷이 표현하여야 하며 자기들의 작품이 싸우는 인민들의 강력한 무기로 되어 그들을 최후의 승리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러한 증오와 투쟁, 호전성과 혁명성 강조를 몇 편의 시를 통해 살펴 보기로 하자.

전쟁시편인 안용만의 「나의 따발총」

“나의 따바리어
 불길을 뽑어라, 뽑어라
 분노의 불길
 증오의 화염을!
 화점으로 육박하는
 백병전의 돌격을 앞두고
 원수를 겨누어
 보내는 총탄, 총탄...
 인민의 이름으로 한알
 조국의 이름으로 또 한알
 원수에게 복수의 불길 뽑어라”

백인준의 시 「하느님과 아메리카」

“이승만이는 하나님 아들로서
 미국 머느리에 조선옷을 입혀서
 남조선 인민앞에 국모로 데려왔네”

이와 같은 시나 작가에게 예술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휴머니즘은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오심 만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미제와 악당들에게 증오와 저주의 불소나기, 멸망의 철퇴를 무자비하게 안길 때 반제 반미 투쟁정신을 힘있게 고취하는 혁명의 나팔로 될 수 있으며 혁명의 무기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조선문학, 77. 6. 류만의 평론 「혁명적 시문학에 반제 반미 투쟁정신을 힘있게 구현하자」).

다음 시를 살펴보자.

“미제? 너는 승냥이
너는 나면서 부터
사람의 피를 마시며 첫 걸음마 떼
해적의 후에 ……”

(김조규, 「미제국주의를 단죄한다」 1절)

이와같이 온갖 악담과 저주가 시에 동원되고 눈썹이 찌푸러지는 언사들만을 늘어 놓은 문학을 과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단편「인민의 편으로」(김승권 작품집 「항쟁의 불길」)에 수록된 작품을 보자.

“그들은 풀뿌리도 다 캐 먹고 먹을 것이 없어 황달병에 걸린 사람처럼 얼굴과 전신이 다 부어 누워 있을 마을의 처자들을 생각하였다. 남조선 천지는 기아와 빈궁, 실업과 유랑, 온천지가 죽음의 땅으로 질식되어 가고 있다. 이대로는 “이 상 태로는 더는 살 수 없다”. (p.206)

이처럼 한국의 사회현실에 대한 비이성적인 중상과 사실의 날조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창작행위는 인간이성의 마비현상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 일체의 문예작품이 김일성 하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 신격화를 위하여 희생되고 있으며, 김일성, 김정일이 모든 작가·예술가의 유일한 교사이자 향도이며, 김일성이외의 비평가나 이론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전문가 보다 군중이 창작의 주체가 되며, 주체사상이 “영생불멸의 구원론”이 되고, 속도전의 기치아래 당이 요구하는 작품을 계획적으로 양산해 내야만 되는 것이다.

8. 언론의 기능

공산주의의 언론 개념

언론매체의 기능

통제와 검열

8. 언론의 기능

공산주의의 언론 개념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과 인간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의미, 사상, 관념들을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전달하는 과정, 즉 인간이 행한 의사전달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언론은 인간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로서 퍼스넬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언론은 일반적 언론의 보편적 개념과는 상이하게도 어떤 명백한 목적의식을 갖는 정치적 차원에서 정의된다.

공산주의 언론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즉 메시지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만 하향식으로 내려주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의사전달은 일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성원의 의사전달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의식은 성립되지 않으며, 오로지 하향식, 일방적 언론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거들은 언론의 대표적 수단인 신문과 그 내용을 구성하는 뉴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의에서 그 개념들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레닌은 일찌기 대중의 위력과 힘을 발견함으로써 대중선전의 중요성을 터득했다.

따라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은 혁명세력을 조직화하는데 필요했고 사람들을 고무, 충동시켜 혁명의 길로 전진시키도록 하는 데는 신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신문을 혁명수행의 주요 수단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레닌선집(상), 동방사, 평양, 1965. p.26)

반면에 그는 자본주의 신문에 대해서는 “부유계급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 그들을 위한 정보, 오락도구로, 근로대중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도구”라고 비난함으로써 공산주의 언론매체가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기능이나 정보, 오락을 제공하는 기능도 배제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레닌은 신문을 “집단적 선전자, 집단적 선동자, 집단적 조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레닌, 앞의 책, p.257) 레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라는 논문(1901년 말~1902년 초 집필)에서 신문의 개념을 이 같이 정의하였다. 또한 「집단적 조직자」라는 점과 관련, 신문을 건축의 발판과 비교하고 발판은 건축의 윤곽을 정하고 개개의 건설자간의 연락을 용이하게 하여 일의 할당에 도움을 주며 조직화된 노동에 의해 달성되는 전반적인 결과를 개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피력하였다. 즉 신문을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조직자, 당의 전위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탈린은 신문을 “대중과 당을 잇는 전달피대로서 당이 매일 매시간 불가결의 언어로 근로계급과 이야기 하는 주요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후르시초프도 “신문, 라디오, 문학, 예술, 음악, 극장들은 우리 당의 예리한 이데올로기적 무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산주의자들의 언론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이 「사상적 무기」로 단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북한 김일성은 “사회혁명과 건설에서 선진사상의 옹호자이며 전파자이고 사회여론의 대변자이며 조직자인 진보적 기자들과 선진적 출판물들의 역할은 자못 큰 것”이며(1973. 12.1 「3.1월간」 창간 37돐 기념 김일성 연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 수 있다”(조선신보, 1973. 11.1일자)고 갈파한 데서 언론의 전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진사상의 옹호자」는 이른바 공산주의 사상의 파숫꾼을 의미하고 전파자는 공산주의 사상을 해설, 선전하는 자로서 공산주의 언론이 그들의 이념과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편 신문내용을 구성하는 뉴스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자유주의 국가와

는 상이하다.

자유국가 신문에서 뉴스는 인간에게 관심을 주고 시의성에 맞게 보도하는 것이며 최상의 뉴스란 대다수 독자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신문에서 정보와 뉴스는 공식발표, 연설과는 달리 그것이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중공에서는 “총과 붓은 정권을 탈취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는 두개의 무기이다. 혁명화하고 전투화한 프롤레타리아 보도 대오가 있어야 만이 모택동의 보도로선에 따를 수 있고, 붓은 노동자, 농민, 병사를 위해 복무하고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복무하며, 전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 복무해야 한다”(강서신문(중공), 1970. 4)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언론은 신문, 뉴스의 개념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산혁명 수행을 위한 총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무기로서만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언론매체의 기능

공산국가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신문이나 간행물을 발간할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발행하는 주체별로 분류해 보면 당기관지(소련 프라우다, 중공 인민일보, 북한 로동신문)와 정부기관지(소련 이스베스차, 북한 민주조선) 그리고 공공기관지(소련 전연방노동평의회기관지 트루드, 북한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가 있다. 또한 당 이론잡지로서는 (중공 홍기, 북한 근로자)등을 별도로 두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기관지」들에 대해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등이 당정책을 해설하며 그 실현을 위해 자기들의 사업내용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 발간하는 신문, 잡지”라고 말하며(정치용어사전, 구월서방, 동경, 1970. p.80) 당 지도자의 혁명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정권의 제반 시책에 대한 해설·선전을

임무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산국가에 있어서의 당 기관지는 모든 언론매체의 중추로서 전매체의 기본 교과서 내지는 당 정책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의견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문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매체 내용구성의 특징은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나 정책, 시책 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수행케 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코민테른 규약문 제 11절은 “공산주의자 인터내셔널에 소속하는 모든 정당들과 조직체들의 출판물들은 코민테른과 그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취해진 모든 공적 결정사항을 공표할 의무가 있다”(군터 놀라우, 부완혁역, 국제공산주의와 세계혁명, 서울, 1972. p.234)고 규정, 공산주의 신문의 임무와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레닌은 소비에트 정권 초기 “신문을 주로 그날의 정치 뉴스를 보도하는 기관에서 인민대중에게 경제적 교육을 시키는 기관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Alex Inkeles,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Harvard Univ. Press, 1958. p.161)

이 같은 맥락에서 레닌은 「정치기사는 더 적게, 경제기사는 더 많이」라는 논문을 프라우다지(1918. 9.20일자)에 게재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책, pp.161~162) 그는 이 논문에서 “정치는 완전히 해명되어 있으며 두 진영, 즉 쫓겨난 「프롤레타리아트」와 한줌의 노예는 자본가의 투쟁에 귀착되어 있다. 정치에 관해서는 아주 간단히 말 할수 있으며 또 간단히 말해야 한다. 경제기사를 더 많이 그러나 일반적 논의의 학문적 개관, 인테리적 계획 등을 잡소리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경제기사의 의미에서 말해야 한다. 경제는 새 생활의 실제적인 건설의 모든 사실의 수집, 면밀한 검열 및 연구라는 의미에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잡소리를 좀 더 적게, 그리고 생활에 좀 더 가까이, 노동자·농민대중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새로운 건설을 하고 있는가에 좀 더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언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의 개념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사회과정의 해석을 의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사상교육과 노력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의 선전·선동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언론보도와 논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1) 객관성 보다는 당성
- (2) 사실성 보다는 이데올로기성
- (3) 기자의 창발성 보다는 당적 영도성
- (4) 속보성 보다는 교양면을 강조

(신문학강의, 일본신문학회, 신문학 평론, 1957, pp.73—83)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객관성 대신에 당성이 강조된 것은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성 보다 이데올로기성의 강조는 공산주의 현실에서 제기된 제반 모순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기자의 창발성이 무시되는 것은 신문의 편집방향, 기사내용 등이 당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공산주의 언론에서는 부정적 측면의 기사는 단 한건도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련신문에서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몇가지 실례를 살펴보자.

- (1) 화재나 희생자수, 문맹자수, 외국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요금이나 상품판매 가격
- (2) 홍수, 지진, 기타 천재 발생사건
- (3) 고아, 부랑자, 절인수
- (4) 마약중독자를 비롯 전염병에 대한 사실보도
- (5) 악성질병의 치료나 조기진단에 대한 새로운 방법 등은 보도 금지(1973. 12.29 중앙일보)

이 같은 예는 북한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 최근 우리 민족사에 획기적으

로 기록될 만한 남북적십자회담 진행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그 예로서, 제8차 남북적십자 서울회담 기간(85. 5. 27~30)중 「로동신문」 5월 28일자 및 5월 29일자를 분석해보자.

5월 28일자에서는 제8차 남북적십자 회담 소식을 3면 하단에 게재, 회담의 의의 등을 경시한 채 그들 사회발전상의 부각에 주력하였다.

5월 29일자는 동회담에 관한 기사를 1면 하단 우측에 게재, 중요성을 무시하면서 3면에 게재한 적십자회담(3건)에 대한 내용은 그들 대표의 기초발언 전문을 게재할 뿐, 우리측 기초발언은 말미에 단 5행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언론매체의 임무와 기능면에서 볼때, 자유주의 언론매체가 갖는 주요목적을 「보도」, 「오락」, 「영향력 발휘」의 3가지로 보고 있으며(Siegfried, Mandel *Modern Journalism*, Pitman Publishing Corporation, N.Y., p. 3), 언론의 기능은 「보도기능, 지도기능, 교육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 등으로 구체화시켜 볼 수 있다. (곽복산 편저, 언론학개론, 일조각, 1971. p.120)

그러나 공산주의에서의 언론매체가 갖는 기능으로서 오락과 광고기능은 단호히 거부된다.

<소비엘 백과사전>은 신문의 기본과업 다섯가지로 “대중의 교육, 당과 정부의 정책 설명, 공산주의 건설에의 대중동원, 비판과 자기비판의 전개, 전쟁상인의 폭로”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동운, 자유권과 공산권 홍보 정책 비교 p.65)

그러나 전통적으로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에 의해 부여된 언론의 임무는 「대중선전, 대중선동, 대중조직, 대중비판 및 폭로」의 4가지 기능으로 요약된다. (Antony Buzek, *How the Communist Press Works*,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 N.Y. 1964. p. 38)

특히 북한에서 언론의 임무로서는 다음 사항들이 강조되고 있다.

- (1) 「김부자」 우상화에 선봉장이 되고
- (2) 당정책 선전과 그 실천을 강조하며
- (3)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민 선동
- (4) 대남 악선전과 적화통일 선동

- (5) 반미·반일·반제 투쟁 선동
- (6) 국제적 지지 획득을 위한 해외선전

통제와 검열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천부권적 자유이며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이러한 자유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자유는 무차별 말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

인간존중은 인간개성의 존중에서 부터 비롯되며 인간개성은 주로 그의 사상 속에 내재한다. 따라서 인간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 즉 언론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출판에 대한 자유,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반대의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산주의 언론은 언론매체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가 없고 개인의 사상을 표현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언론자유가 전무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은 그들 헌법에는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양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소련 헌법 제 125조는 “모든 시민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대중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공헌법 제 28조는 “공민은 언론, 서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를 신앙할 자유와 종교를 신앙하지 않으며 무신론을 선전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 53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

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규정은 어디까지나 헌법구조상의 요식행위이며 마치 그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위선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위선은 북한은 물론, “진정한 언론의 자유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당과 김일성에 추종하도록 하는 당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한도내에서만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유보조항에서 증명된다. 또한 “언론자유는 근로자들에게 김일성의 교시와 당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허용되고 있다”(1975. 1. 27, 평양방송 해설)고 주장한 데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자유스런 언론이란 국가로선을 가장 책임성 있게 전달하고 그것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로부터의 통제가 항상 합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자유는 “근로자의 이익에 적합하고 또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구실하에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완식, 공산주의 이론 현실 비판전서(4권), 내외문화사, 1964, pp.72~75.)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부르조아 정치단체들을 위한 자유이다. 이런 단체나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란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고, 이는 반대파의 일을 촉진하며 적을 돕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살을 원치 않으며 그러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도입치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란 신문을 구입할 수 있고 그것을 편집할 수 있는 자유인 동시에 부르조아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사고 팔고 하며 부패시키고 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IPI Survey, “The Press in Authoritarian Countries” (Zurich, 1959, p.15)

이 같은 레닌의 발언은 여하한 언론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음을 스스로 정당화시키고자 하려는 데 있다. 또한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언론 부재를 실증시키

는 자료로서, 다년간 소련에서 거주한 바 있는 영국 여성 유틀리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 소련 작가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한다. 즉 “생각한 것은 말하지 말라, 말한 것은 쓰지 말라, 쓴 것은 출판하지 말라, 출판한 것은 즉시 회수하라.”(케네스 코그로브, 공산주의 사상통제 방법 고찰, 국토통일원, 1973. 2)

이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자유가 소극적인 자유의 개념으로 대치되고 절대적인 자유가 상대적인 자유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의 자유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신문에 대한 검열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가지 수단을 통해서 실시된다. 즉 (1)편집자나 기자의 선발과 훈련, (2)모든 신문이나 특수집단의 신문내용과 활동을 다루는 광범위한 지령 하달, (3)공식적인 감시기관의 이용 등이다.

북한에서의 언론통제는 크게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문의 경우, 각 부에서 작성된 기사는 부장, 편집국장, 주필의 검열을 거치는 과정을 말하며, 외적 통제는 정무원 직속의 출판지도 검열총국 신문과의 검열과 최종단계로서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신문과의 검열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무원 직속 중앙방송위원회 아래 각 시·도 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군 방송위원회가 있어 이들의 직접 통제와 최종적으로 당 선전선동부의 통제와 검열을 받는다. 또한 라디오 수신기의 다이알을 고정시켜 북괴의 방송만 청취할 수 있도록 다이알권(the right of dial)의 박탈을 상례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보자.

“북한 라디오는 북한의 방송만 듣고 남한 방송은 들을 수 없는 고정다이알로 되어 있다.”

“텔레비전의 세 채널이 모두 저녁 9시에 끝난다.”

“프로그램은 6·25에 대한 애국적인 영화와 김일성부자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며,

김일성부자 일색의 뉴스이다.”(The New York Times 1984. 7.10)

“신문과 TV는 엄격히 통제되어 감시, 방문하는 사람조차 다른 나라일은 아무도 모르게 된다.”

“뉴스로서는 김정일의 공장, 농장 현장시찰과 「남한의 노동자 혁명의 명백한 증거들」이 취급된다”. (The observer 1983. 6.9)

이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언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과 실제상에 제기되는 제반 모순들을 대중에게 알려서는 안되고, 대중은 또한 그들 정권 담당자들이 알려주는 사실만을 주입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인민의 사고를 단일화, 획일화시켜야 되며, 혁명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맹종만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은 그 정책과 시책의 정당성을 보여줘야 하고, 인민의 맹종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귀와 눈을 속여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된다.

9. 종교 실태

북한의 종교관

종교 탄압

종교 실태

종교단체의 현황

종교 이용 정책

9. 종교 실태

북한의 종교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자연과 사람들을 지배하는 초자연적, 초인간적 힘, 즉 신이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숭배하는 것”이며 “인간의식에 현실이 환상적으로 왜곡되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이의 해독성을 들어 모든 종교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마르크스-엥겔스전집, p.466)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는 까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종교관에 근거한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신음소리이며 인민의 아편”이라 했고, 레닌은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기초는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는데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종교단체는 언제나 부르조아계급의 착취를 비호하고 무산계급을 마비시키는 반동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르크스·레닌의 종교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신론적 견해들을 정립한 것이 바로 북한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에서의 소망, 즉 말세(末世)의 신앙적인 관심을 미신적인 것으로 돌리고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이 지상에서 모든 목적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김일성은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요, 예수교와 불교를 믿는 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해독성을 제시하는 데서부터 반종교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김일성저작선집 1권, 평양, 1967. p.173.)

이렇게 북한이 모든 종교를 부정하고 종교활동을 극렬하게 탄압하여 온 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전술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현재까지의 무신론자들의 사상전개가 종교의 몽매성, 미신성을 철학적 입장에서 온건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산주의 이론에 기초한 현실성을 가미하여 종교를 “자본가들의 착취를 정당화한 반동적 사상의 도구”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의 해독성 이론에 그들이 일상적으로 강조하여 온 계급교양을 결부시킴으로써 종교에 대한 무산계급(일반주민)의 적대감정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을 반종교 활동에 동조토록 하는 것과 함께 이른바 김일성사상을 용이하게 주입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김일성의 신격화 운동에 종교적인 신앙심과 신학사상은 일대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김일성은 “불세출의 용장”이라던가 “걸출한 군사전략가”나 “영웅”으로 추앙하던 차원에서 하나의 「신격」(神格)을 부여하는 경지에 까지 격상시키고 있다.

1974년 2월 하순 중앙 및 지방당의 사상 관계자들에게 하달된 「유일사상 10대원칙」에서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며,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그의 교시를 신조화”할 것과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의 수 많은 어록들은 「교시」라는 이름 아래 경전과도 같이 외경심을 갖고 대해야 되며, 모든 주민들은 이 교시를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김일성은 북한 공산주의라는 특수집단의 교주이며 주민들은 교주의 사상에 완전 동화되어 그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신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공산주의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 여타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의 그림자도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수 없으며, 만약 어떠한 종교가 북한지역에 침투하는 것을 용인하는 경우, 몇십년간 사상교양으로 다져진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사상의지적 통일」(북한당국의 선전에 불과하지만)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때 북한지역에 존재한다는 기독교와 불교 등의 종교는 명목상의 존재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순전히 정치적 과시용과 전략적 목적하에 조직하였음을 알수 있다.

세째로, 무신론 사상과 반종교 운동은 대남, 대미전략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종교를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식민지적 약탈, 그리고 침략전쟁을 위한 주요한 지주”로 사용되었다고 비난하고 신앙생활은 반혁명활동으로서 부르췌아사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김일성은 “악질적인 장로, 목사들이 공산당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반동적 행위를 해왔다”고 공격한다.

특히 북한은 유일사상의 확립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국이나 다른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침투해 오는 종교적 사상을 철저히 봉쇄하고, 나아가 “종교의 간판 밑에 반혁명적인 행위를 조직하여 종교사상을 우리들 속에 부식시키려는 기도에 철저히 투쟁해야 한다”는 교양사업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대남전략면에서 적화의 주된 방해자는 종교인들이라는 점, 그리고 종교는 반공적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상투쟁의 대상으로 무신론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침략자(미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착취하는 기구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여 반미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목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종교의 간판을 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예배당을 짓고 기독교와 승미사상을 퍼뜨려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책동”이라는 등 미국인들의 선교활동을 비난하고 있다.

결국 이런 주장은 곧 무신론의 주장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남한적화’의 주된 장애가 한국과 미국임을 인식시켜 종교의 반동성을 부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종교 탄압

북한은 구헌법 제14조에서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1972년 12월에 제정한 헌법 제54조에서도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조문만을 가지고 이를 해석한다면 마치 북한지역에 어엿한 종교단체가 실존해 있고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행할수 있기 때문에 반종교 선전활동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는것 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 동 조문의 전반부는 완전히 형식화된 공문이며 후반부에 제시된 「반종교 선전의 자유」만이 그 적용과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해방 이후 북한당국이 자행한 반종교 선전활동의 실상을 극명하게 파헤침으로써 그들이 선전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허구에 가득차 있는가하는 사실을 반증하고자 한다.

-종교활동 제한기-

해방 후 북한 공산집단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했으며 여기에 「민주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치작업에 착수했다.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이러한 「민주개혁」을 직접 집행하게 되었으며, 당시 계층구성으로 보아 임시인민위원회의 성격은 광범한 계층을 대표토록 하는 것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해서 종교대표, 예컨대 기독교와 천도교 대표들도 정권에 참여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당시의 혁명성격을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광범한 계층을 포섭하려는 전술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종교에 대해서는 탄압, 말살 보다는 제한, 이용하는 정책을 쓰게 된 것이다.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 등 북한지역 기존종교의 교세는 상당하였으며, 이러한 종교세력들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는 상극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혁명의 성격상 또는 공산주의 세력기반의 미숙 등으로 이들에 대한 전면적 탄압정책을 쓸 수가 없었으

며, 탄압 보다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종교세력의 확대를 저지하며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만을 취했다.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3. p.1228)

북한에서의 공산화의 첫단계는 토지개혁이었는데 이것은 동시에 종교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조치이기도 했다. 토지개혁으로 모든 종교단체는 그들이 소유하였던 재산을 대부분 잃어야 했다.

1946년 3월에 실시된 토지개혁은 이른바 무상몰수, 무상분배로서 5정보 이상의 종교단체 소유지는 모두 빼앗겼다.

천주교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덕원의 베네딕트 수도원을 들수 있는데, 이 조치로 수도원의 건물과 대지를 제외한 토지를 몰수당함으로써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불교와 기독교의 경우 토지개혁으로 교회 및 사찰 소유토지 148,055정보를 몰수당하였다.

토지개혁은 해방 후 북한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소작인과 빈농에 대한 일종의 인기정책이었지만 많은 기독교인은 이 개혁에 의한 수익자였다고 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놓였던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북한에서의 기독교인의 사회계층이 이른바 부르주아지에 가깝고 중소기업, 상업경영자, 중소지주 및 인텔리에 집중되고 있어 북한체제에 새로운 기본계층이 되는 노동자, 농민에게는 기독교의 뿌리가 광범위하게 내리지 못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47년 말에 실시된 화폐개혁도 종교단체들에게는 현금마저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천도교는 화폐개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천도교는 교인이 많았으므로 수백만원의 자금을 일시에 몰수 당한 셈이 되었다.

여하튼 토지개혁과 화폐개혁, 그리고 중요산업의 국유화 등에 의해 기독교인은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 처해 있었고, 1946년 월남한 사람 중에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종교에 대한 제한정책을 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종교단체와 정당들을 조직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46년 11월 28일 북조선 기독교연맹, 1945년 12월 25일 북조선 불교도연맹, 1946년 2월 1일 천도교 북조선총무원 등이, 그리고 1945년 11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북조선 민주당, 1946년 2월 8일 천도교인을 대표하는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 등이 조직되어 모든 종교인들은 각 종교단체에 망라되었다.

이러한 종교, 정당 및 단체들은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이라는 통일전선단체의 성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른바 민주개혁을 비롯한 공산화의 정치작업 수행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에는 종교를 전면 말살한 것이 아니라, 제한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해방초기 북한당국이 실시한 종교제한정책과 활용정책 하에서 천주교와 기독교인들이 겪은 수난의 역정들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의 공산정권이 각종 어용종교단체를 만들어 그들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한 것은 이들 큰 종교단체 안에 분열군을 조성하여 이 분열로 말미암아 종교단체들이 자멸하기를 꾀한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천주교 애국단」과 같은 어용단체를 만들었던 중공과는 달리 처음부터 강제수단으로 임했다.

이 때문에 천주교는 다른 종교들 보다 제일 먼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덕원의 베네딕트 수도원의 몰수에서 시작되었다. 40년이나 된 이 수도원은 빵공장, 포도주 양조장, 인쇄소까지 갖추고, 신학교도 부설되어 있는 현대적 문화시설이기도 했다. 북한 공산당은 이런 시설에 눈독을 들이고 「포도주 불법생산」「불온물 인쇄」의 죄명으로 1949년 5월 9일 주요인물이 연행당하고 수도원과 신학교를 점령하였다. 당시 동 수도원에서 검색, 체포된 신부, 수녀들의 인원은 67명에 달하였다. (북한총람, p.1229)

이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해 12월 8일까지 평양의 신부들을 모조리 체포, 구금하였으며 6·25동란을 전후하여 이 때까지 잔존하였던 신부들도 모두 체포되어 옥사 또는 순교의 수난을 겪었다. 북한 땅에서 희생된 천주교 순직자는 내외국인을 합쳐 총 96명에 이르고 있다.

김일성은 한국의 전통적 종교인 불교나 천도교 등의 종교 보다도 기독교를 자신의 반대세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목사, 장로라고 할 때 상투적으로 “반동적” 또는 “악질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호칭한다. 또 자본가, 지주, 매판자본가 등의 말과 함께 목사나 장로를 열거하기도 한다.

여하간 기독교인이 북한의 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존재로서 여겨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아래의 몇가지 사항에서 김일성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우하였는가 하는 점과 당시의 미미하였던 기독교 활동의 편린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신의주 학생 반공운동

신의주 학생 반공운동은 용암포에서의 학생시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다. 이것은 해방이 되자마자 정국의 혼미를 이용, 재빨리 공산체제를 확립하려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기독교의 영향이 비교적 강한 신의주의 학생들이 1945년 11월 23일을 기하여 일으킨 대규모적인 반공시위였다. 김일성은 동 사건에 대해, 공산당원이 지방 각기관에 침투하지 못하였으며 또 민중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의주에서는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중학생들이 무장하고 도당본부를 습격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한 민족사회주의자란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당시 신의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설립할 정도로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를 가르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 반탁운동

반탁운동은 북한의 체제가 아직 혼돈상태에 있을 때에 소련에 의지하는 김일성 노선과 북한의 민족주의전선이 대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일성은 반탁운동에 참여하는 자를 “극히 소수의 반동분자”로 몰아 세웠다.

이러한 소수 반동분자 가운데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주당 간부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조만식이 신탁통치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감금되어 행방불명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의주 학생 반공운동과 반탁운동은 해방직후 북한에서 김일성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며, 김일성은 직접 기독교인을 지목하여 비난하는 것은 삼가하였으나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포괄적 용어로 비난한 2대사건이었다.

(3) 선거거부운동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1946년 11월 3일에 실시된 도·시·군인민위원회의 선거를 거부하고 나선 것은 실은 「주일성수」(主日聖守)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 선거를 하필이면 일요일인 11월 3일에 실시한다고 공표하였다. 북한지역의 기독교의 공식기구인 「이북5도 연합회」는 선거거부를 결의하고, 그것을 당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 세력이 미약했고 종교세력이 방대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한 회유책으로 어용단체인 기독교도연맹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선거 참여를 호소케 한 바도 있다.

-종교말살기-

김일성은 6·25동란을 반미선전과 결부시켜 북한의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절멸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전쟁 중에는 기독교인을 반동분자로 몰아 무차별 학살을 감행했고, 교회당을 파괴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신앙인들을 가정에 연금하여 철저한 감시 속에 두는 「두문벌」제도가 사용된 것도 이 때의 일이다. 특히 수북당시 치안대 협력자와 월남가족(기독교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들이 온갖 제재와 감시를 당하였다.

불교에 대한 말살정책을 살펴보면 당시 북한의 사찰은 인민군의 징집을 반

대하여 도피하는 청년들의 은신처요, 공산당을 반대하는 자유주의 투사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시와 탄압이 극심했다. 이러한 감시로 인해 승려들은 생계수단을 잃었을 뿐 아니라 불교도들을 인민군으로 징집해 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방후 종교에 대한 유화정책은 북한의 체제 확립과 대남정책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으나 6·25라는 무력남침으로 기왕의 종교에 대한 활용정책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종교단체를 참여시켜 통일전선에 입각한 정권유지와 대남정책의 구사는 전쟁이라는 폭력수단으로 인해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치적인 배려라는 차원에서의 종교정책은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전서, 극동문제연구소, 1980, pp.572~576)

1972년의 남북접촉 당시, 강양욱이 “북한에는 기독교가 없다”고 자인한 말을 인용치 않더라도 6·25를 전후하여 북한에서의 종교활동은 전면 말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공산집단의 기본권 박탈, 자유평론사, 1978, pp.71~78)

종교 실태

북한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들이 말살당하였음은 이미 기술한 바 있거니와 이와 같은 종교 공백기를 창출해 놓고도 북한은 최근 어용종교단체를 재정비하여 각종 선전활동에 이용하는 한편, 북한지역내에서도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 처럼 행세하고 있다.

영국 속담에 “종교는 말이 아니고 실행”이라고 하였고, 아미엘은 “종교는 방법이 아니고 생활이다”라고 지적하였듯이 종교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 방법이 되어서는 안되며 종교정신은 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북한 공산당은 겉 모습은 마치 양처럼 분장을 하고 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늑대와 같은 음흉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땅에서는 주민들의 종교적 생활은 일체 찾아 볼 수 없는 데도 종교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정치적 행위만은 빈번하게 실행되는 모순에 찬 종교정책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종교단체이든 정당이든(모두 어용단체에 불과하지만),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이론단계에서 모순의 존부를 불문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허구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들 종교단체의 실상과 북한지역내에 과연 종교의 편린이라도 존재하는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사상교육을 강력히 전개하였으며 전쟁준비정책으로서의 4대 군사노선이 강행되자 이른바 불신계층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였고, 성분조사를 통해서 과거 종교인들을 비롯한 불신계층을 색출하여 철저한 감시와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대우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60년대 후반에 이르자 김일성 혁명사상 및 주체사상에 위배되는 모든 사상을 「잡사상」 또는 「반동적인 사상」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사상통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의 내왕과 접촉이 이뤄지게 되자 북한의 마스크에서까지 잠적했던 종교단체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종교단체로서는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등이, 그리고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는 한 때 잠적했다가 1974년경에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점으로 보아 남북대화를 계기로 종교단체들을 재정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세계 종교계의 추세가 이념문제에서 현실참여, 인권문제, 핵감축 등 일련의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을 돌리게 되고, 해방신학자 등 공산주의자들이라도 대화가 용인되고 있음을 의식하게 되자, 이에 영합하자는데 저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종교정당으로서 「우당」이라는 명분아래 기독교계통의 조선민주당과 천도교계통의 천도교 청우당은 50년대 말에 그의 하부조직은 해체되고 상층부만 개편된 바 있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부각되어 종교단체와 합

께 대남, 대외 선전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와 같이 재정비된 종교단체와 종교정당들의 활동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종교단체 본래의 임무이며 사명인 교리의 전파라던가 교세의 확장 등에는 관심이 없으며 또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체제를 갖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몸뚱이는 없고 머리만 있는 괴수와 같은 존재이며, 요란한 간판은 있으나 진열하고 판매할 상품이 없는 상점과도 흡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종교단체인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종교단체가 출현한 것은 북한지역이 종교부재라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종교의 주체가 되는 교인과 승려가 없고, 신앙의 근본이 되는 성경과 경전이 없으며, 예배할 교회당과 성당이 전무한 형편에서 과연 이들 종교단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올바른 종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 종교단체들은 다시 상술하겠지만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남 및 해외공작 등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북한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북한은 상기와 같은 위장종교단체를 재정비하고 북한에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 처럼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판 뿐인 종교단체만 가지고 북한지역에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게 되자, 최근에는 보다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 선전에 합리성을 부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은 북한에도 기독교가 있는것 처럼 기만하기 위해 성경책을 자체내에서 인쇄하고 있는가 하면, 재미 반한교포들을 불러들여 북한에서 기독교 의식의 예배를 보게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85년 5월에는 조선기독교연맹 사무장 고기준 목사라는 자를 중공에 파견한 바 있다.

북한에 기독교 목사가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있으나 고기

준목사가 증공에 가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는 이제까지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측은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기자들이 북한에도 종교가 있느냐는 질문 공세에 최근에는 북한에도 약 6천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대답하면서도 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는 전쟁 때 모두 불타 단 한 곳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답변은 1972년 당시 강양욱이 북한에는 기독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유로서 6.25당시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의심이 생겨 대부분의 사람이 신앙을 잃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이 기독교와 결부시킨 상투적 반미선전의 일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6천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릴 교회당이 없다는 이 모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것은 6천명이라는 숫자가 가공의 숫자이며 오히려 교인이 전무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 공산당의 계속적인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지하의 교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선전 과시용으로 출판한 것으로 보이는 성경책과 함께 어용종교 단체의 어용목사가 대외에서 종교활동을 했다고 하여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85년 9월22일 이산가족 재회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은 그들이 숙박한 평양 고려호텔에서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이 주일예배와 주일미사를 가진 바 있다.

북한측 주장대로 만약 북한에도 기독교가 있다면 이 같은 주일예배와 주일미사에 북한내의 기독교인들도 합석해서 북한에도 기독교가 허용되고 있다는 그들의 정치선전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단 한명의 기독교인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도 북한의 기독교단체는

일체의 기념행사를 거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북한내에는 간판 뿐인 기독교집단만이 존재할 뿐 기독교인의 종교적 신앙활동은 전면적으로 정지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총람, p.1236)

한편 불교의 경우도 기독교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며 로동당의 어용 외곽단체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선전하는데 있어 가장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종교 보다도 불교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록 승려는 없을 망정 불교사원들이 문화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현실을 십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3년 4월21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소위 조선불교도연맹 제8차대회라는 것을 개최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대회 자체가 계속성이 없이 느닷없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 대회 개최의 저의 자체가 종교말살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불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묘향산 보현사에 임시변통의 승려를 배치시키 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 북한측은 공해상에서 강제 납북했던 자유대한의 어부들을 묘향산 보현사를 참관시킨 일이 있으며, 지난 8월에는 황해도 봉산군 소재 성불사의 복원을 발표하였다. 그 복원 목적에 대해서는 「불교의 허위성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여 종교말살정책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불교활동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급급하고 있으나 북한 지역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종교활동이나 불교의식 또는 행사가 거행되었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종교실태는 그네들이 헌법상에서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것과 달리 공백상태임이 분명하며, 동 조문은 한낱 공염불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하부조직을 전혀 갖지 못하고 상부조직만으로 활동하는 어용종교단체

들은 본래의 종교활동과는 거리가 먼 정치선전기구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북한 공산당이 정권수립 후 현재까지, 평화와 폭력이라는 이중적 성격의 정책을 서슴없이 전개하여온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신성한 종교의 간판 아래 이를 대내·대남전략과 해외공작에 전술적으로 활용하려는 기도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의 현황

북한은 각종 종교단체들이 하부조직을 전혀 가질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상부조직 뿐인, 다시 말해서 몸뚱이는 없고 머리 뿐인 기이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하등의 주저함이 없이 이들 단체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게 한다든가 국제 종교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키는 등으로 북한지역의 종교의 존재와 활동을 부각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다.

기독교를 위시한 이들 종교단체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신이나 교주들의 사상, 교리를 전파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등의 순수 종교활동은 일체 전개할 수 없으며 다만 로동당의 정책에 호응하고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시녀로 전략한 것이다.

북한이 70년대 초기부터 이와 같이 유명무실한 종교단체를 재정비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한 것은 그 활용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데 있다.

「종교활동의 말살지역에서 종교단체의 조직」이라는 이윤배반과 자기모순을 노출시킨것 짚은 북한 공산당이 지금까지 시현하여 왔던 불신적 행위를 감안할 때 실로 다반사에 불과한 일인 것이다.

이처럼 자기 모순을 노출시키면서까지 종교단체를 결성한 까닭은 이들을 대내에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케 하며, 아울러 대남

전략과 해외공작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책략인 것이다.

이제 최근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당의 시녀로서 어떠한 활동양상을 보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내정치면—

북한의 정치체제는 철저한 유일당 독재체제이다. 특히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사회 전체를 일색화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사업에서 절대적인 과제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주체사상과 합치되지 않는 종교사상이나 이념정당이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를 허용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또한 북한은 그간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전개해 왔으며 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정책으로 그 누구도 감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총람, p.1238)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상항하에서 종교단체의 존재는 몹시 동떨어진 것이며 위화감을 주는 존재로서 책략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은 6차 당대회 이후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에 대한 정책지지와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전략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정치공작 수단으로 위장 종교단체들을 정비하고 그 명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82년 8월에는 천도교 청우당 제6차대회를 34년만에 개최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83년 4월22일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제8차대회가 개최되었음을 발표하였고, 81년 11월28일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창립 3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에도 종교단체들의 기념행사를 계속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들 종교행사를 통하여 각종 대남비방을 일삼는가 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공산주의와의 연공합작과 민족 대통일전선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위장 종교단체들이 북한의 대내정책을 지지하고 대남 비방활동을 자행해 온

내용을 살펴 보면 당대회 결정사항이나 김일성의 지시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서슴없이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노사문제나 학생시위가 발생하면 즉각 이를 지지 선동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으로 노동당의 시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종교인들을 선동하여 반정부 활동을 벌리도록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1981년 7월22일에는 각급 정당 및 사회단체 등과 연합으로 주한미군을 모략하는 「고소장」을 발표했고, 8월 9일에는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천도교 인사들에게 민족통일 촉진대회 소집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11월23일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 명의로 대남비방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83년 4월에는 불교도 연맹 8차대회를 개최하고 “거족적인 반미운동을 벌이며 남조선 인민들과의 연대성을 촉구한다”는 대남선동 문서를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와 반한·반미투쟁의 광범위한 전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남조선 불교도 및 세계각국의 불교도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북한 공산집단이 대남선전 선동에 종교단체를 적극 이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처럼 북한은 종교단체를 활용하여 정치선전을 합리화하고 대내·대남관계에 있어서는 선동집회 등을 통하여 그들의 대남전략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북한 종교단체의 실상인 것이다.

북한은 종교단체를 대내정치에 활용하는 한편, 「우당」(友黨)정책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우당으로서는 기독교계통의 조선민주당과 천도교계통의 천도교 청우당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우당」정책의 실시는 대내정치면에서 유일당 독재를 은폐하고 다당제(多黨制)라는 「민주성」을 과시하는데 있으며 최근에는 김정일 권력세습의 당위성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이들 「우당」들에 대한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1980년 10월 6차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조선민주당과 천도교 청우당은 각각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6차당대회에서 주요하게 제기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하였다.

또한 천도교 청우당 6차대회(82년 8월)에서는 김정일을 “또 한분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이라고 칭송,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격의 차원으로 부각시켜 김정일체제 구축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바도 있다.

그리고 1983년 2월22일에는 조선사회민주당 정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불교도연맹의 편지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각국 사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서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주장과 비핵 평화지대 설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저지를 호소하는 등 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치선전으로 일관하였다.

천도교 청우당도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북조선 천도교 교인에게 보내는 격문」이라는 대남 선동문을 발표했는데 천도교에서 사용하는 고유한 용어까지 등장시켜 위장 종교활동을 벌였다.

1985년 4월9일 평양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7기 4차회의에서는 이른바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하고 정치선전공세에 총력을 집중하였는데, 이 때에도 천도교 청우당이 지지담화를 발표하고 당의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요컨대 「우당」의 존속은 다분히 한국 및 외국을 의식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이며, 북한의 대내적인 사회통합과 정치체제의 강화 등에도 그 존재의의의 일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남 전략면 -

종교단체의 시너지적 역할은 대남 공작면에서도 여실히 그 면모를 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당면과제로서 제기하고 있는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 북한은 소위 「반파쇼 민주화투쟁」에 한국의 종교인을 비롯한 반공주의자라 하더라도 현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면 이에 합세케 하여 광범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남전략은 한국내의 종교인, 지식인 등을 선동하여 반정부적 행동을 취하게 하는 한편, 그들 주장에 동조케 하는 등으로 용공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남침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의 종교집단들은 남한에서 일부 종교인들의 사회문제 비판 또는 「인권」, 「민주」등의 색채를 띤 활동들이 전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각종 선전, 선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남한 종교인들의 반미투쟁을 선동했으며, 이외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의 철수와 「민족통일 촉진대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정치적 선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조선불교도 연맹에서도 한국내의 불교문제를 들고 나와 “불교 종단 내부에 알력과 대립을 조장하면서 승려들을 탄압하고 종단재산을 몰수했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악선전을 전개한 바 있다.

최근에도 북한은 “불교도 연맹” 명의로 한국 불교계가 서울에 불교 법왕칭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85년도에는 불교대표단이 최초로 중공을 방문, 중공 불교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한 바도 있고, 지난 8월에는 소련 불교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 쌍방 불교단체들이 접촉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 불교대표단은 북한방문에 앞서 8월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 목적에 관해 「생활상 이해증진과 접촉강화 및 지구 평화문제 토의」등 이라고 밝혀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정치선전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종교단체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대남모략 선전선동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종교인을 대상으로한 직접적인 침투공작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김일성은 휴전 후 남한내에 파괴된 지하당을 재건하고자 대남공작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지령하였는데 그 중에는 종교인을 가장한 접근과 침투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북한이 대남전략과 관련, 위장 종교인을 한국내에 침투시킨 예는 허다하며 그 대표적인 예는 48년 9월 강양육의 지령을 받은 간첩 장광덕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강양육은 장광덕에게 “월남하여 청년운동을 전개하되 남한에 거주하는 이승길목사(장광덕과 지면)와 그의 「해외 토마스 전도대」에 침투하여 청년신도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킬 것과 진실한 기독교 신자로 가장하여 남한 정부를 타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64년에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을 졸업한 기독교인 간첩 김영작은 북한 대남공작의 총책임자인 김중린으로부터 한국내의 사회혼란 조성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학계, 언론계, 종교계에 지하당을 조직하려 했다. 또 74년 5월 울릉도 거점 간첩단사건의 주모자 전영관 역시 63년부터 의사 등을 대상으로 포섭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75년 11월 학원침투 간첩사건에서도 한국 신학대 대학원생인 김철현이 재일간첩에게 포섭되어 노동당에 입당하였으며 이어 학생봉기를 선동하여 4.19와 같은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78년 이후 북한은 한국의 불교계에도 침투하려는 기도를 보였는데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재산분규가 발생하였을 때 조총련으로 하여금 태고종을 지원하는 등으로 접근을 기도했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위장 종교단체 및 위장 종교인을 동원, 대남 선전선동을 일삼는 일방, 대남 공작원을 침투시켜 사회불안을 조성하면서 한국의 목사, 장로 등 각계층 인사들을 이른바 「반파쇼 민주화 연합전선」에 결속시킬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해의 공작면-

앞에서 수차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은 각종 종교단체를 당의 외곽단체로 어용화하여 대내정책과 대남전략에 활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제종교기구의 가입공작과 국제회의에서 정치선전선동을 감행하는 등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독교 계통에서는 74년 8월 20일 조선기독교도연맹 명의로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가입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은 북한내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세계적인 기독교 활동무대에서 정치적 선전을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교회협의회측은 북한내에서의 기독교신자와 성직자 및 교회의 숫자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의 교역자가 일단 북한에 파견되어 교회상황이나 교인수를 조사한 후에 가입 신청을 심의한다는 조건으로 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1976년 11월25일~28일 체코의 부르노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지역국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세계기독교 평화회의에 조선기독교 연맹 부위원장을 파견하였는데 이 회의는 1957년 체코의 프라하에서 창설된 후 3~4년마다 총회를 개최하는 국제종교단체로서 소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종교회의를 빙자하여 순수 종교활동과는 무관한 정치적 선전만을 일삼아 온 단체이다.

북한 공산집단은 이 회의에서도 「조선에 관한 결의문과 성명」을 채택토록 하였는데 그 성명이란 것이 신앙이나 종교문제에는 일체 언급이 없이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미군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 그리고 남한 종교인들의 탄압 중지를 주장하는 등 한결같이 반미사상의 고취와 한국을 비방모략하는 선전 선동적인 정치문제만을 나열하였다.

1976년 7월26일~28일 사이에도 동경에서 11개국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아시아 불교도 평화회의에 북한은 조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인 홍화두 외 2명의 대표단 파견을 신청했는데, 당시 이 회의 개최측은 북한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없고 불교도연맹이라는 단체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며 대표단 중에는 당 중앙위원이 들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측의 회의참가를 거부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집요한 정치공작을 전개하여 조총련 대표를 참가시키고 북한을 이 회의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케 하였으며, 한반도에 관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게 만들어 한국을 중상 모략하였다.

한편 북한은 81년 11월3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근교에서 이른바 재독(在獨) 반한단체인 「조국통일 해외기독교자회의」를 내세워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 통일대화」라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추진과 그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선전과 함께 마치 이 집회가 남북한 전체 기독교인들의 집회인 것 처럼 위장하려 했으며, 특히 기독교와의 대화를 내세움으로써 북한내에 종교가 실재하는 것 처럼 유도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의 호응을 얻어보려 했었다.

이어서 북한은 81년 7월 불교대표단을 아시아지역의 인도, 태국, 스리랑카, 버마 등 불교국가에 파견하여 이른바 「인민외교」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82년 6월에는 몽고의 울란바트르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 불교도 평화회의에 조총련 대표단을 파견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는 등 대남 선동공작을 기도한 바 있다.

한편 북한 공산집단은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해외에 거주하는 종교인 교포들에 대한 접근도 집요하게 시도하여 왔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 일부 반한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포운동에 북한이 침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과 친북, 반한인사들이 상호 방문하고 통일문제 토론회나 대화모임 등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통로를 확보해 놓고 있다.

방북자들 중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 귀국 후 이른바 민족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로스엔젤스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동 기도회에서 방북 목사들의 설교내용은 북한의 통일방안을 해설하는데 치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방북한 바 있는 친북 성향의 종교인을 앞장 세워 종교의식 중에 북한을 선전하도록 하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종교 이용 정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지역에서 기존 종교를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종교의 명의만을 내걸고 이를 활용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북한 공산집단의 종교말살정책은 지금도 「공산주의 교양」 아래 변형된 상태로 계속되고 있으며, 대신 김일성을 교조로 하는 이른바 「김일성사상」이라는 사교(邪敎)를 주민들에게 신봉토록 강요하고 있다.

김일성은 유일사상이란 허구적 논리를 창작하여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를 신조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위해서는 죽어도 영광”이라는 식의 광신상태에까지 도달할 것을 강요하고,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도 「유일사상」과의 병존을 허용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운동은 보다 격상되어 마치 하나의 종교형태를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북한 현실이다. 즉 김일성을 교조로 하고, 그의 어록을 성경으로 하며, 그를 찬양하는 가곡들을 「찬송가」로, 김정일과 당간부들을 「사제」로, 김일성의 생가를 「성지」로, 인민대학습당을 「대성당」으로 바꾸어 놓는 등으로 북한땅의 새로운 「김일성교」를 만들었다.

이러한 「김일성교」가 있는 기독교를 위시한 전통종교들이 유명무실한 존재로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북한의 전통종교의 존재는 극히 심각한 문제로 될 것이며 김일성사상과 특정 종교와의 마찰을 야기시키는 불씨가 사회저변 깊숙히 온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간 이러한 종교의 말살정책과 함께 김일성사상의 일색화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한국 종교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세계종교계의 조류도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따른 공산주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자 이를 활용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존재와 그 활동상을 선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단체와 종교정당을 재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국제종교기구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나타냈으며 해외 반한단체들과 친북성향의 교포 속에 침투하여 북한의 통일방안을 선전하는 정치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종교인으로 위장하여 한국내에 침투, 지하당 조직에 주력하는 한편, 종교인들의 일부 정부 비판내용을 「통일을 향한 애국적인 행동」으로 규정, 「반파쇼 민주화 연합전선」에 결속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통해 전개하고 있는 대외, 대남전략의 허구성과 정치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선전 선동에 한치의 동요도 있어서는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북한은 지금까지 위장 종교인을 이용하여 한국 종교계에 깊숙히 침투하는 대남전략을 구사하여 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근래 국내적으로 종교인, 성직자들의 사회활동이 확대되고 현실참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영합한 북한의 대남 침투여건이 용이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성직자에 대한 포섭활동이 활발해질 것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종교인들의 인식과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북쪽사회 어디에 와 있나

1986년 12월 10일 인쇄

1986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처 북한연구소

값 1,500원

